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8 NO. 1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ODA 국가협력전략(CPS)의 의의와 향후 운영방향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와 EDCF의 과제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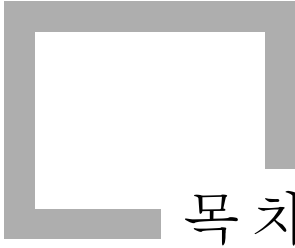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8년 제1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8년 3월
발행인 : 은성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김태수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03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33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III. 한국의 개발협력

93 ODA 국가협력전략(CPS)의 의의와 향후 운영방향

(곽상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

107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와 EDCF의 과제

(조정화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장)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135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161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EDCF

I. 국제개발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 1. 논의배경
 - 2. 개도국의 원조정보 생산 및 활용 현황
 - 3. 그간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 4. 한계 및 향후 개선 방안
 - III. 우리나라의 원조정보 개선 노력
 - 1. 개도국의 원조정보 개선 지원
 - 2. 원조 공여통계 구축 및 개선 노력
 - 3. 원조정보의 투명성 강화
 - IV.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국제사회는 2015년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과 함께 개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개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중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달성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leaving no one behind) 원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발 데이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즉 ‘개발을 위한 데이터’(Data for Development) 관리 역량은 SDG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핵심 근거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개발 데이터는 공여국간 원조사업의 중복에서 오는 비효율을 예방하고 연계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가 관련 근거에 기반을 두고 원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일반 국민에게 개발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일수록 관련 개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뒤떨어진다. 개발 데이터 개선을 위한 원조 지원액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특정

소수의 공여국과 수원국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의 개도국 개발 데이터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여통계 개선의 노력을 짚어보았다.

II.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동향

1. 논의배경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의 SDG Agenda(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채택에 따라 17개 목표(Goal), 169개 세부목표(Target) 및 232개 세부지표(Indicator)가 수립되었다. 이는 향후 SDG 달성을 위해 과거보다 더욱 많은 원조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SDG 목표 17번(Goal 17)은 공여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을 범분야 우선순위 목표로 내세우고 개발 데이터, 모니터링, 책무성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국가 통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양질의 개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역량을 키워야 함을 내세우고 있다. 적절하게 수집된 개발 데이터를 근간으로

생산된 원조정보는 공여국이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사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개발 데이터의 중요성은 증거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범세계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 파악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통계 거버넌스의 구축과 정부의 통계 책임성 강화, △정보 투명성 증진을 통한 인권 강화 추구 등의 추세와도 연결된다.

2. 개도국의 원조정보 생산 및 활용 현황

개도국의 개발 데이터 생산·활용 역량은 매우 중요하나 다수의 개도국에서 환경·기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2차 정보의 수집은 고사하고, 출생·사망 등 인구 등록 관련 기초 데이터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정보 등의 행정통계는 SDG 관련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집역량은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56%의 국가만이 기초 인구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완성도가 90% 수준인 불완전한 정보이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초 인구통계 수집률은 15%로 아시아 지역(동남아시아 36%, 남아시아 33%)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어림사리 통계를 수집한 경우에도 데이터 출처마다 그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

기초 통계뿐만 아니라 SDG 이행수준 및 원조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정보는 공여국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만큼 낙후되어 있다. 232개의 SDG 세부지표(indicator) 중 2/3가량이 이행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며 88개는 이행수준 측정방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OECD DAC 회원국의 42%가 정보 불충분으로 성과지표 측정이 불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원국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공여국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발협력 사업의 결과(outcome)와 장기적 영향(impact)에 대한 성과정보는 원칙적으로 개도국 국가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하지만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개별 프로젝트와 전체 수치의 연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공여국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필요한 통계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비단 유용한 원조정보의 생산·활용 능력뿐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개방성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Open Data Watch의 국가정보 개방성 평가지표(Global Open Data Index)에 따르면 저소득국일수록 제3자가 원조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Open Data Watch의 2016년 정보 개방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소득국 52.9점, 상위중소득국 38.2점, 하위중소득국 33.6점, 기타저소득국은 29.1점을 기록하여 소득수준과 정보 개방성이 비례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개도국 국가 통계체계의 미비는 관련 분야 법·제도 등 규정의 부재와도 연결된다. 전 세계 37개국만이 UN 통계 기준에 부합한 국가 통계 법령을 갖추고 있는바,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무분별한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공여국의 전문가 파견, 소프트웨어 보급, 지식전파 등을 통한 제도정비 지원은 일부 개도국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도국이 통계 분야 관련 규정과 제도를 견고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계 생산역량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그간의 원조정보 개선 논의

(1) 원조정보의 개방성 강조

정보의 개방성, 즉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를 뜻하는 오픈 데이터(Open Data)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SDG 달성의 중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사업의 개방성 보장, 즉 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 변경 또는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사업정보의 민간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 세계 약 3조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

1) Mckinsey&Company (2013).

구체적으로 원조정보의 개방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도모, △보건·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도시화 지원,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으로 교통·통신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시티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²⁾

이에 국제사회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가별 정보 개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발족되었다. 2013년 9월 설립된 미국 민간단체인 Open Data Watch가 대표적인 기구로 매년 국가별 정부사업의 정보 개방도 순위를 발표한다. 또한, 원조 투명성 관련 국제 캠페인 조직인 영국의 민간단체 PWYF(Publish What You Fund)는 전 세계 원조 공여기관을 평가한 원조 투명성 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를 산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2008년 아크라 제3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을 계기로 창설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for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는 모든 공여국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원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ATI 공개 정보는 전년도 ODA 지원 실적을 공개하는 OECD DAC 통계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최신 사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2)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의 강조

최근 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정보의 역할은 데이터

2) World Bank Group (2015).

혁명과 연관이 깊다. 데이터 혁명은 더욱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데이터 혁명이 데이터의 양, 처리속도, 다양성과 정확성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기회를 개발 협력 분야에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즉, 모바일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을 위해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혁명은 기술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UN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보고서³⁾는 SDG 목표 지표의 이행수준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정보의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혁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연계하여 시의적절한 고품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개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개발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켜 정보수집·생산 활동의 책임감을 늘려야 한다.

국제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개발협력 분야에 데이터 혁명을 실현하고 이끌 수 있는 독립단체를 설립하였다. 2015년 정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제 이니셔티브 GPSDD(Global

3) UN (2013).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를 출범하고 GPSDD와 파트너십을 맺은 민간단체인 SDG Data Labs을 설립하였다.⁴⁾ 그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 혁명을 촉구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UN Global Pulse Lab을 설립하였다. UN Global Pulse Lab은 2013년 뉴욕본사와 인도네시아 소재 아시아 지부를 시작으로 2015년 우간다 소재 아프리카 지부를 설립하고, 개도국의 산발적인 데이터를 한데 모아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는 중간 매개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8년 1월 국제개발부(DFID)⁵⁾내 개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18-2020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18 to 2020: doing development in a digital world)을 수립·발표하였다. DFID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개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데이터 세분화 이행계획(Data Disaggreg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3) SDG 이행수준 모니터링 정보와 성과정보 개선 논의

국제사회는 SDG 채택에 따른 세분화된 목표의 달성도와 이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이정표를 수립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UN 통계이사회가 전문가 집단(각국의 통계청 대표로 구성)과 함께 개발한 SDG 지표 제안서를 UN 경제사회이사회가 2017년 6월 채택하였다. 즉, 17개의 SDG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 이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232개의 세부지표(Indicator)와 측정 프레임

4) CSIS & JICA (2017).

5)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워크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세분화된 지표 측정 결과는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집단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입안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소외집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집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SDG 세부목표와 지표를 성과측정 프레임워크에 결합함으로써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공통된 기준으로 SDG 이행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정보의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169개 세부목표 중 절반가량은 개발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명확한 성과정보는 사업의 가치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책 의사결정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각종 협의체를 통해 성과연계 세부목표를 공여국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별 공여국의 성과 프레임워크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11월 독일 국제협력 공사인 GIZ⁶⁾는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SDG 모니터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주체 파트너십인 Partners for Review를 출범시켰다. 또한, GIZ가 아프리카의 개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Commission: AU)과 합동으로 설립한 Data Lab은 아프리카 국가 통계청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인구데이터, SDG 데이터를 생산한다.⁷⁾

6)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7)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2018).

〈표 2〉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 추이

(백만불, 승인액)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RS 분야코드	102	109	104	203	69	119	99	113	74	71
설문조사 등	109	209	238	197	364	482	414	606	471	471
합 계	211	318	343	401	433	602	513	719	544	541
ODA중 비중(%)	0.14	0.23	0.20	0.24	0.26	0.35	0.30	0.39	0.29	0.30

출처: Paris 21 (2017)

그러나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 지원은 특정 소수의 공여국과 공여기관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가 작고 정체되어 있어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간극을 보인다. 동 분야 ODA 지원액은 2015년 기준 전체 ODA 지원액의 약 0.3%인 541백만불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여자가 특정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캐나다, 유엔인구기금(UNFPA), 유럽이사회,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ODA 지원액의 75%를 차지하였다. 또한, 양자 원조로 지원된 181백만불 중 78%가 상위 5개국(캐나다, 스웨덴, 영국, 한국, 호주 순)의 지원액이다. 민간 투자자 중에서는 빌게이츠 재단이 2015년 기준 총 승인액 14백만불을 기록하며 수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⁹⁾

수원국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 또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상위 10개 수혜국이 동 분야 ODA 지원액의 94.8%를 차지하였으며 지원액의 56%(약 10조불)가 아프리카 대륙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9) Paris 21 (2017).

〈표 3〉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의 지역별 현황

(%)

구 분	2009-2011	2010-2012	2011-2013	2012-2014	2013-2015
아프리카	37	40	45	51	56
아시아	23	29	32	28	22
유럽	7	7	6	6	6
중남미	19	18	11	6	5
기타	14	6	7	9	1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Paris 21 (2017)

〈표 4〉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의 주요 수혜국(2013~2015)

(백만불, 승인액)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국가	콩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말리	차드
금액	99.8	68.7	47.5	41.1	35.3	32.2	29.0	23.2	22.6	18.1
비중(%)	22.7	15.6	10.8	9.3	8.0	7.3	6.6	5.3	5.1	4.1

출처: Paris 21 (2017)

한편 공여국의 지원 활동은 국가 전반적인 통계시스템 개선과 통계 수집·활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여자가 관심 있는 특정 통계치 수집을 위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액의 40%가 SDG 모니터링 등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상세히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통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7년 「개발 데이터 강화를 위한 UN 케이프타운 행동계획」(2017 Cape Town Glob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에서 개도국 개발 데이터 생산·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행동 강령을 구체화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동 행동 계획은 개도국 지원이 과거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 즉 전체론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5〉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 패러다임 변화

구분	전통적 접근방식	새로운 접근방식
범위	단편적 기술협력에 한정	통계조직의 리더십, 거버넌스 체계 개선 등 전반적 역량강화 지원
목적	공여자 관점의 특정분야 데이터 수집에 집중	개도국의 국가 통계 발전 전략에 기반
재원조달	한정된 외부 재원조달	다양한 재원조달 수단 및 파트너십 활용
사용그룹	수집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등 내부목적으로만 활용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데이터 수요 만족

출처: OECD (2017a)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민간의 정보 상업화 오·남용,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개발 데이터 생산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이는 국가 통계청이 개발 데이터의 생산과 사용을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통계 생산·처리 역량과 함께 리더십,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 체계를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추어 강화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UN 경제사회위원회가 설립한 개발 데이터 강화 파트너십인 Paris 21(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글로벌 통계개발 파트너십)은 통계개발을 위한 개도국 국가발전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NSDS)을 마련하고 개도국이 중장기적(5~10년)으로 국가 통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보급하였다. 동 전략은 Paris 21이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IDA의 주요 협력국 앞으로 제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IDA 협력국의 88.3%가 NSDS를 자국의 국가발전계획에 이미 반영하였거나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여기관 간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이외에도 데이터를 생산, 사용하는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파트너십, 즉 데이터 협약(Data Compact) 체결을 통해 상호합의 원칙 아래에 원조정보가 생산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사용자와 생산자간 소통이 강화되고 정보의 생산과 개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협약의 추진은 그간 각종 데이터 재단(Development Data Funding)을 통해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아직 세부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 데이터 강화를 위한 국제논의의 주요 플랫폼인 Paris 21 이사회에서 데이터 협약이 마련되면, 일부 시범 국가를 대상으로 파일럿 데이터 협약을 시행하고 추후 범세계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여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마커의 도입이 원조정보 개선을 위한 ODA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마커는 원조사업의 특정 정책목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ECD DAC 통계 기초정보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에 기재하는 지표로, 원조 현황 추적을 위해 활용된다. CRS++ 기초정보는 현존하는 개발 데이터 중 가장 널리 준용되는 포괄적인 정보이다. 구체적으로,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사이트는 2016년 중 전 세계 26만 명 이상 접속하였으며, CRS++ 기초정보는 6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신규 정책마커 도입은 공여국이 개도국의 원조정보 개선을 지원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고, DAC 회원국의 관련 원조활동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우리나라의 원조정보 개선 노력

1. 개도국의 원조정보 개선 지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원조정보 개선 노력에 발맞추어 개도국의 개발 데이터 수집·활용 역량 강화 분야의 주요 공여국으로 활약하고 있다. Paris 21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 분야 ODA 규모는 2015년 승인액 기준 10.8백만불로 양자 공여국 중 4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통계청은 개도국의 개발 데이터 생산·활용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 한국의 선진 통계지식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고자 통계역량 강화사업,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표 6〉 통계청의 주요 무상원조 지원 내역

구분	사업명	지원연도	금액	
자체 ODA	프로젝트	몽골 통계DB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12	4.2억원
		베트남 통계역량강화사업	'12~'13	5.9억원
		스리랑카 통계역량강화사업	'14~'16	22.3억원
		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사업	'16	2.1억원
	초청연수	선진협력기관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	'11~,매년	0.84억원 ('16년)
		UNSIAP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	'99~,매년	0.38억원 ('16년)
	분담금	UNSIAP/PARIS21 분담금 납부	매년	1.2억원 ('16년)
사전조사	ODA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매년	0.1억원	
국제 파트너십	세계은행 (WB)	카자흐스탄 국가통계역량강화사업	'12~'16	23백만불
		몽골 국가통계시스템강화사업	'10~'12	3.1백만불
	IDB	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사업	'16	5만불
		페루 통계역량강화사업	'16	9만불

출처: 통계청 (2017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KOICA는 1994년부터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의 통계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말 누적 기준 총 52개국 앞으로 12.3백만불을 무상원조로 지원하였다.

〈표 7〉 KOICA의 통계역량 강화 주요 지원 내역

(백만불)

구분	사업명	지원연도	금액
프로젝트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 강화사업	'14~'16	2.5
	방글라데시 기획부 통계청 행정능력 강화 전산화	'08~'09	1.1
	중국 농업통계 조사 지원	'94~'06	1.0
	기타(가나 통계서비스 인적역량 강화사업 등)	'00~	1.3
	소 계		5.9

구분	사업명	지원연도	금액
개발컨설팅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 강화	'14~'16	1.5
	미얀마 IT기반 통계국 역량강화사업	'13~	0.3
	소 계		1.8
초청연수	통계 기법 연수 및 교육 훈련	'05~	3.6
봉사단	주요국(에콰도르, 베트남 등) 봉사단 파견	'94~	1.0
전문가 파견	중국 농업통계 전문가 파견	'06~	0.1
합 계			12.3

출처: KOICA 제출자료(2018.3.2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DCF는 개도국의 직접적인 통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정보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교통·토지·주민행정 전자정부 구축 등 국가 전반적 데이터 시스템 확충을 위한 ICT 사업을 유상차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ICT 사업은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닌, EDCF의 중점지원분야로 2017년 말 기준 누적 지원액 총 65건, 약 21억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개발 데이터 강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 통계위원회의 24개 위원국(Members)¹⁰⁾ 중 하나로, 2016~2019년 임기 동안 중국, 일본, 카타르와 함께 아태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은 지난 2년간 UN 통계위원회 부의장국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데이터 고품질화와 개방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10) UN 경제사회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며,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4개국, 동유럽 4개국, 남아메리카 4개국, 서유럽 7개국으로 구성되어 4년 임기 동안 의제별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2. 원조 공여통계 구축 및 개선 노력

우리나라는 원조정보 수집·공표 기능의 강화를 위해 OECD DAC 가입 이전인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OECD 앞 통계를 보고하였다. 당시 DAC 비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ODA 총 규모만 보고하면 되었지만, 회원국 기준을 준용하여 개별 사업정보인 CRS++의 형태로 ODA 통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다.

2010년 우리 정부는 OECD DAC 정식 가입에 따라 발생한 통계보고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을 우리나라 ODA 통계 취합·보고기관으로 지정하였다.¹¹⁾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 △OECD 앞 제출 통계의 취합, △통계자료의 확인·검증, △DAC 통계 작업반 회의 참석·논의사항 대응, △ODA 통계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우리나라의 ODA 통계는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원하는 원조정보를 조회하고 목적에 맞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즉, 주요 납세자인 국민이 우리나라의 원조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OECD 보고를 목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취합하는 ODA 통계와 달리, 우리나라 모든 원조 시행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ODA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개별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우리 정부는 2011년 우리나라 전체 ODA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ODA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¹²⁾ 한국수출입은행은 동 시스템에 국내 모든 원조 시행기관의 ODA 예산 총괄정보, N-2년 예비사업정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이행현황 정보 등을 분기별로 입력받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 앞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ODA 모니터링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원조 시행기관의 통계와 모니터링의 자료 이중 입력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ODA 모니터링시스템과 DAC 통계보고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다. 2017년 4월 개편 완료된 「ODA 통합보고 시스템」은 대중에게 더 나은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ECD DAC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CRS++) 수준으로 기존보다 사업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상세 사업내용을 사용자 분석 의도에 맞게 조회할 수 있으며 지도기반의 시각화 구현을 통해 ODA 사업 현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시스템 내의 「ODA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원조 시행기관 간 사업 연계 및 N-2년 예비사업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 「ODA 통합보고시스템」의 활발한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원조정보를 모든 부처 간 공유하고 사업조정·연계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2)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1).

3. 원조정보의 투명성 강화

우리나라는 수집된 원조정보의 대내외 공표를 통한 원조 투명성 제고의 첫걸음으로 2014년 3월 'IATI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 1월 정식 가입하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 ODA 통계 보고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IATI 원조정보 공개의 취합·보고 담당기관으로 지정하였다.¹³⁾

우리 정부는 IATI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IATI 아시아 회원국 중 최초로 2016년 8월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IATI 기준에 부합한 원조정보를 공개하였다. 2016년 8월 실시한 최초 정보 공개에서는 EDCF와 KOICA의 원조정보만 시범적으로 공개하였으며 2017년 12월 실시한 3차 정보 공개에서는 ODA 연간 예산액 100억 원 이상인 국내 17개 시행기관이 정보 공개에 참여하였다. 2018년 상반기 실시하는 제4차 정보 공개에는 국내 모든 원조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등 원조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IATI 원조정보 공개 내용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¹⁴⁾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1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14) www.odakorea.go.kr(국무조정실), www.edcfkorea.go.kr(한국수출입은행)

〈표 8〉 우리나라 ITAI 원조정보 공개현황

구 분	공개 시기	공개 기관	공개 항목
1차	'16. 8월	EDCF, KOICA	13개
2차	'17. 4월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EDCF, KOICA	18개
3차	'17. 12월	ODA 연간 예산액 100억원 이상 시행기관 (17개)	22개
4차 (예정)	'18. 상반기	모든 원조 시행기관 ('17년말 기준 49개)	22개

출처: 저자 작성

한편, 공여국의 원조사업 추진계획 공유는 수원국의 원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수원국 정부에 원조정보 공개를 확대하고자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 등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원조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점협력국 24개국에 대한 중기 지원전략을 영문과 현지어로 번역하여 협력국 정부에 전달하고 ODA 지원 규모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EDCF는 국가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바탕으로 협력국 정부와 정례협의, 국별 프로그래밍 등을 실시하여 수원국의 EDCF 원조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IV. 시사점 및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 원조정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책수립, 자원배분, 이행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개발협력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정보와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원조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관리는 SDG 달성의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원조사업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 데이터 생산·활용 역량 강화 지원에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도국 통계분야 지원을 우리나라 원조활동의 우선순위로 두고 국별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와 중장기 후보사업 협의 시, 원조정보 생산·활용 역량 강화 지원이 우선순위를 밝히고 수원국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심층 면담을 통해 유망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우리나라 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닌 ICT 분야 사업으로 동 분야 중점지원을 통해 아국기업의 해외 진출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무상 연계 지원 제안 등을 통해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유형의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의 결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EDCF가 지원하는 개도국 통계관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무상원조기관이 지식협력, 정책자문 사업을 연계하여 데이터 수립·관리 노하우, 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등의 지식공유와 인력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DCF와 KOICA, 통계청 등 유·무상 ODA 시행기관이 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연계 가능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유·무상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선진 공여기관과 통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별 공여국으로서의 통계 수집 비용과 노력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개발 데이터 연합체를 구성하여 통계지표 수집을 일원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데이터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케이프타운 행동 계획」 등 주요 국제사회의 통계분야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제사회의 개발 데이터 개선 논의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넷째, ODA 사업 초기단계부터 SDG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지표는 대상사업이 목표 대비 잘 이행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사업 시행과정 중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 적절하게 수립된 성과지표만

이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데이터의 폭발적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데이터 접근과 활용 능력의 격차 증대로 인해 정보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활용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견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통계역량이 부족한 취약국도 통계 수집·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과 관련 도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개발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 방법이 개도국에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제7차 의결안건 제7-3호 ODA 통계기관 선정방안(2010.10.25)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1). 제7차 의결안건 제7-2호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2011.1.25)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2차 의결안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안)(2015.11.1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오픈데이터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 주오이시디대한국대표부 (2018). DAC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세미나 결과 (2018.3.21)
- 통계청 (2017a).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2017년 ODA 사업개요 (2017.11.20)
- 통계청 (2017b). 유엔통계위원회 결의안 보도자료(2017.3.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향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7). 유엔 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해외문헌

- CSIS & JICA (2017). Harnessing the Data Revolu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GPSDD (2016). The State of Development Data Funding 2016,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 ICLEI (2016). Measur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SDGs
- Mckinsey&Company (2013). Open Data: Unlocking innovation and performance with liquid information
- OECD (2016).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Statics: Lessons Learned, Future Steps “*A focus on the use of non-official data sources for national statistics and public policy*”
- OECD (2017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OECD (2017b). Strengthening the results chain: Synthesis of results based management by providers
OECD/UNDP (2016).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6 Progress Report
Paris 21 (2017). Press 2017: Tracking Aid to Statistics
UN (2013). 「The Report of the High-Lev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ssion (2017). Cape Town Glob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World Bank Group (2015). Open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CF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¹⁾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목 차

- I. 서 론
 - II. 기후변화 주류화 정의 및 리우마커
 - 1. 주류화 논의동향
 - 2. 리우마커
 - III. 리우마커를 활용한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분석
 - 1. 분석 기준
 - 2. 국제사회의 '기후 ODA' 현황
 - 3. 주요국의 기후 ODA 사업 심층분석
 - 4. 시사점
 - IV. 주요국의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
 - 1. 일본
 - 2. 독일
 - 3. 프랑스
 - 4. 영국
 - 5. 미국
 - 6. 시사점
 - V.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 1.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기후변화
 - 2.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과제
 - VI. 결론
- 참고문헌

1) 본고는 2017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서론

- 기후변화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조해 옴.
 -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개도국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주류화(mainstreaming)가 핵심 쟁점임.
 - 우리나라는 대개도국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국제 협상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ODA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주요 공여국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 주류화 및 ODA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기후변화 ODA 추이를 측정하는 국제적 기준인 리우마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ODA 규모를 파악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ODA 사업의 세부내용을 비교 분석함.
 -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우리나라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개선방안을 도출함.

II. 기후변화 주류화 정의 및 리우마커

- 국가의 발전 또는 국가 간 협력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도전과제이자 이미 달성한 개발성과를 위협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됨.
-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 방식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책임이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기후변화는 특정 분야로 간주되기 보다는 개발의 전 분야에서 위험성과 영향을 고려하는 범분야 이슈로 다뤄지는 추세로서,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 또는 ‘통합(integration)’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1. 주류화 논의동향

가. 정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14)는 동료검토에 나타난 회원국 사례²⁾로부터 주류화의 의미³⁾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OECD DAC (2014a).

- “... mainstreaming ...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trategy to make that theme an integral dimension of the organisation’s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주류화는 해당 이슈를 기관의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함.)
- Gupta(2010)⁴⁾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류화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관점에서 개발 정책·프로그램·프로젝트를 설계, 구성 및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음.
- 의사결정 초기 즉, 구상부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전 단계에 걸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기후변화와 개발을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함.
- 저자는 주류화와 통합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 통합은 체크리스트와 같은 수단을 활용, 기존 개발 정책 및 프로젝트에서 기후변화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일반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적인 요소(add-on component)로 인식함.

3) 주류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젠더에 관한 국제회의인 제4차 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임.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이 채택되었는데, 성 평등 촉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 주류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되었음.

4) Gupta, J (2010).

○ 주류화는 목표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주류화가 목표일 경우, 기후변화가 개발의 규범적, 내용적, 절차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과정으로서 주류화는 주류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설계하는 지에 초점을 둠.

〈표 1〉 기후변화 주류화 단계

수준	감축	적응	도구
개별 프로젝트	온실가스감축 및 영향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설계	기후변화 적응 및 영향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설계	
기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식별	포트폴리오 내 적응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식별	
'Climate proofing': 적응 체크리스트	(해당 없음)	적응을 촉진하고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 포트폴리오 스크리닝 • 감사(audit) • 보고서 발표
감축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비화석연료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발굴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EIA)
기후주류화: 정책 및 사업의 재설계 및 재구성	온실가스감축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재설계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개발협력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합의 • 기후 렌즈 도입 • 시스템 접근 • 정책개입

자료: Gupta (2010), Table 3.5 저자 재구성

나.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AC은 회원국들의 리우 환경협약에 따른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리우마커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개발협력에 있어 리우 협약의 통합에 관한 정책문서⁵⁾를 발표하였음.

- 2005년에 발표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⁶⁾은 조화 원칙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공여국간의 조화를 명시하였음.
 - 회원국들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관련 조화를 추구하는데 진전을 보였으나, 기후변화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2006년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에 관한 선언⁷⁾이 발표되었고, 2009년에는 이에 관한 정책지침⁸⁾이 발표되었음.
 - 동 지침은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국가, 분야, 프로그램·프로젝트 수준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5) OECD DAC (2002).

6) OECD DAC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paras.40-42.

7) OECD DAC (2006).

8) OECD DAC (2009).

- (국가 수준) ① 정책형성 단계: 국가 장기비전 및 단·중기 정책 수립 → 계획 단계: 다년도 개발계획 수립 → ② 예산배분 단계: 적응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 → ③ 프로그램 이행 단계: 섹터단위의 개발계획 및 예산 배분
- (분야 수준) ① 정책형성 단계: 분야별 전략 및 정책수립 → 계획 단계: 분야별 계획 수립 → ② 예산배분 단계: 분야별 예산한도 설정 및 적응을 위한 추가재원/기금 마련 → ③ 프로그램 이행 단계: 분야 프로그래밍 실시
- (프로그램·프로젝트 수준) ① 사업발굴 단계: 잠재적 기후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가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 ② 사업 승인 (심사) 단계: 기후 리스크 심층분석 실시, 적응수단 판별, 적응 활동의 우선순위화 및 선별 → ③ 사업실행 단계: 신규사업의 경우 선택된 적응수단의 이행, 기존사업의 경우 이전 단계에 개입하여 적응수단 이행 → ④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프로젝트 내 적응수단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2) 국제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원칙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⁹⁾은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함.

9) 세계은행그룹, AFD, AfDB, ADB, CAF Latin America Development Bank, Credite Agricole S.A., Cassie des Depots Group (CDC), 남아프리카공화국개발은행, EIB, EBRD, IADB, JICA, KfW.

- 기후변화 주류화는 사업 추진시 기후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기후변화 렌즈를 착용하고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¹⁰⁾

□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5대 원칙

① 기후변화 지원전략 (COMMIT to climate strategies)

- 기관 차원의 의지, 고위 임원의 리더십, 명시적인 전략적 우선순위, 정책 공약 및 목표

② 기후 위험 관리 (MANAGE climate risk)

- 기후변화의 위험을 이해하고 적극 관리하며, 위험을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 새로운 투자를 평가(assess)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고객과 함께 고민

③ 기후 스마트한 목적 추구 (PROMOTE climate smart objectives)

- 저탄소 및 기후 복원력 있는 투자를 위해 기후변화 위험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도구, 지식의 발굴을 촉진. (예: 녹색채권, 위험분산 메커니즘, 혼합금융수단 개발)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과 기후위험 고려 방안을 모색

10) "Mainstreaming approaches means making climate change considerations a core component of how an institution conducts business. It implies a shift from incremental financing of climate activities to ensuring that climate change is a core consideration and "lens" through which institutions deploy capital, new opportunities, and managing risk," from Bonnel, A. and S. Swann (2015). Mainstreaming Climate Action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Emerging Practices.

④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 투자 사업의 기후변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수단 개발.
온실가스 통계, 녹색투자 촉진, 기후변화 관련 자산배분, 기관 자체의 탄소발자국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

⑤ 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 기후변화 관련 성과(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관 지원사업의 탄소발자국, 위험 관리방식에 대해 투명성 유지 및 보고

□ 2017년 5월 기준 30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¹¹⁾에 참여함.

○ 참여 기관의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은 다자개발은행 대표(EBRD), 양자 및 지역개발은행 대표(AFD), 선진국 민간금융기관 대표(HSBC), 개도국 민간금융기관 대표(YES Bank)로 구성

○ 2017-18년 기간 동안 △기후 위험(접근방식, 대응수단, 방법론) △기후 대응전략의 이행 도전과제 △도시 차원의 접근과 적절한 금융수단 △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11) 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Principles for Mainstreaming Climate Action 홈페이지 (<https://www.mainstreamingclimate.org/workstreams/>)

2. 리우마커

가. DAC 지침의 주요 내용

□ 리우마커 도입배경

- 리우마커는 기후변화 주류화와 기후변화 관련 개발재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됨.
- 리우마커 적용대상은 양자 ODA, 수출신용을 제외한 기타 공적 자금(Other Official Flows) 등임.
 - 일반예산지원(A01), imputed student costs (E02), 부채탕감(F01, 부채스왑 제외), 행정비용(G01), 개발인식(H01), 공여국 내 난민지원(H02)은 제외됨.
-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다자 ODA)은 개별 공여국이 리우마커를 표기하지 않음.

□ 점수 부여방식

- 공여국들은 개별 지원사업을 리우마커 적격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하며, 세 가지 점수 중 하나를 부여함.

- 해당 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함.
 - 주(principal) 목적으로 하는 경우: 2점,
 - 부수적(significant) 목적으로 하는 경우: 1점,
 - 협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not targeting): 0점

- 기후변화 감축 또는 적응이 지원사업의 설계 또는 동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in the activity documentation, 예: 지원 약정서, funding proposal), 해당 사업은 주 목적 사업으로 2점을 받게 됨.
 - 즉, 감축 또는 적응 목적이 아니었으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감축 또는 적응 활동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감축 또는 적응 활동이 주요 동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수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1점을 부여함.
 - 동 사업의 목적은 기후변화 이외의 다른 주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어떤 사업이 0점을 받았을 경우, 이는 기후 마커 관점에서 스크린됐으나, 감축 또는 적응을 목표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만약 마커 적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경우('not assessed'), 마커 필드는 빈 칸으로 남겨두어야 함.

- 리우마커 통계보고 핸드북은 투명성을 위해 특히 주 목적 사업 및 대규모 사업의 경우, CRS에 보고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Long Description' 필드)에 감축 또는 적응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기후변화 감축 마커

- (정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또는 제한하거나 흡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의 활동이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임.
- (적용기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기후변화 감축 마커로 인정됨.
 -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가스 포함,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 온실가스 흡수원(sinks) 및 저장고(reservoirs) 보전 및 증가
 - 제도구축, 역량강화, 규제 및 정책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이슈를 수원국의 국가개발목표에 통합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무 달성을 위한 노력 제고

□ 기후변화 적응 마커

- (정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기후

변동성 포함)에 대한 인간 및 자연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 기후변화 스트레스, 충격 및 변동에 적응·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 복원력 유지 및 증가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노출 감소

* 적응사업은 정보 및 지식 제고를 비롯하여 역량강화, 적응활동의 계획 및 시행을 포함

○ (적용기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기후변화 적응 마커로 인정됨.

- 기후변화 적응 목표가 활동문서에 명확히 명시

- 사업 내역에 상기 정의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

□ 2015년 말 DAC의 환경네트워크(ENVIRONET)와 통계작업반(WP-STAT)은 제5차 전문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리우마커 정의 및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유

○ 주요 특징 (Handbook 2016, p.6; Handbook 2011, p.7)

① 기후변화 관련 지원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질적 방식

② 기후변화가 개발협력사업에서 주류화 및 통합된 정도를 파악

③ 수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¹²⁾에 대한 지원규모 파악

④ 다수 리우마커의 중복 적용 가능

12)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NAPA, NAP, NAMA, NDC의 수립

- 개정 핸드북은 Indicative Table을 부록으로 추가하였음.
 - 핸드북의 내용은 규칙이 아닌 지침(guidance)임을 유의할 필요
 - 참고자료로서 KfW의 내부 지침, MDB의 기후재원 보고 방법론이 사용되었으며, DAC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

나. 최근 논의동향

- 2013년 OECD 통계작성반(WP-STAT)은 DAC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적응마커에 대한 질적 검토(quality review)를 실시함.¹³⁾
 - (배경) DAC은 기후변화 완화 마커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응 마커를 도입하였으며, 적응 마커가 도입된 이후 2010, 2011년 통계보고 결과에 대해 각국의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의 일관성 및 시스템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 이를 통해 DAC 회원국들은 주목적 및 부수적 목적사업에 대한 점수 적용 방식이나, 기후펀드 앞 기여액에 대한 보고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등 통계보고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바탕을 마련함.
 - 또한 대규모 활동에 대해 사업 요소 단위에서 리우마커 점수를 부여하고, 마커의 정의상 적격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시스템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13) OECD DAC (2013a).

○ (내용) 각국의 적응마커 활용현황은 정확도, 보고의 일관성(공동 기금 및 프로그램 지원의 통계보고, 완화마커와의 중복 여부, 주요 지원분야), 데이터품질 검토 메커니즘 측면에서 비교분석함.

□ 적응마커에 대한 질적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활동 기술 시 적응 목적을 보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② 적응 마커 개선을 위해 더욱 분명한 적격성 기준을 도입하거나, 동일 기관에 대한 각국의 기금 지원이 같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참고 목록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③ 정량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i) 현재의 마커 체제를 유지하되 기후 관련 원조에 대한 과대계상을 제한하거나, ii) 주목적 부수적 목적의 마커대신 표식(flag) 방식으로 대체, iii) 또는 MDB와 같이 사업대신 구성요소별 적응마커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됨.

□ 리우마커 통계보고 핸드북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개최된 제4차 전문가회의¹⁴⁾에서는 리우협약에 대한 정량적 통계보고 방안으로서의 리우마커 역할이 논의됨.

○ 리우마커는 당초 리우협약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회원국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개발협력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환경적 이슈의 주류화 정도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14) OECD ENVIRONET-WP-STAT Task Team (2015).

- 즉, 리우마커를 활용해서는 재원 흐름의 대략적인 수량화만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 구성요소(Project components) 단위의 통계보고와 계수(coefficients) 적용이 리우마커 관련 쟁점으로 부각됨.
- 논의 결과, 사업 요소 단위의 통계보고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계수의 적용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여짐.
- 리우협약에 따른 EU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은 기후변화 재원 보고에 있어 리우마커를 활용한 보고액 산정방식(지원액×마커수준별 계수)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전환계수를 자의적으로 선정·적용함.
- EU는 기후변화 관련 기금(예: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ESI Fund)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별 특정 가중치를 부여함.¹⁵⁾
 - 구체적으로 주목적일 경우 100%, 부수적 목적일 경우 40%를 적용함.

15) European Commission (2013). Article 8. Sustainable Development, pp.342~343.

- 프랑스 재무부의 양허성 차관과 FASEP(Private Sector Aid and Studies Fund)에 대해 기후변화 주목적·부수적 목적인 경우 각각 100%, 40%의 계수를 적용함.
- 뉴질랜드는 적용 계수가 분명히 명시되거나 상이한 기본값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수적 목적의 사업에 30%의 계수를 적용함.
- 스페인은 해당 사업이 감축과 적응 두 가지를 모두 부수적 목적으로 고려한 경우 40%, 둘 중 하나를 부수적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20%의 계수를 적용함.

〈표 2〉 주요국의 리우마커 적용 계수 비교*

국가	'주목적' 계수	'부수적 목적' 계수	비고
호주	100%	30%	기후변화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프로젝트별, 30%
오스트리아	100%	50%	
벨기에	100%	40%	
덴마크	100%	50%	플랑드르(Flanders) 정부 사례
EU	100%	40%	
핀란드		10~100%	적응 또는 완화가 주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인지에 따라, 적용 비중이 10~100% 사이로 다양
프랑스	100%	40%	프랑스 재무부의 양허성 차관과 FASEP 펀드 (Private Sector Aid and Studies Fund)의 경우
독일	100%	50%	

국가	'주목적' 계수	'부수적 목적' 계수	비고
아일랜드	100%	50%	
네덜란드	100%	40%	
뉴질랜드	100%	30%	적용 계수가 분명히 명시되거나 상이한 기본값이 있지 않는 한 30%를 적용 (2014년 5월 제출한 제2차 격년보고부터)
포르투갈	100%	0%	
스페인	100%	20~40%	완화 또는 적응 한가지를 부수적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20%, 둘다 부수적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40%
스웨덴	100%	40%	
스위스	51~100%	1~50%	

자료: UNFCCC Secretariat (2017), p.10

* 3차 격년보고서(BR3) 제출 시 리우마커 사용 및 관련 계수를 명확히 밝힌 경우를 정리

III. 리우마커를 활용한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분석

1. 분석 기준

□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되는 리우마커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을 분석하였음.

- 1998년 도입된 기후변화 감축마커와 2009년 도입된 기후변화 적응 마커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주류화를 확인할 수 있음.

-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마커 활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 각 회원국이 양자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감축 또는 적응)를 사업의 주목적(principal) 또는 부목적(significant)으로 목표화한(targeted) 경우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류화 사업으로 파악함.
 -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마커상으로 0 으로 표기)까지 포함하여 기후변화 마커를 '표기한(screened) 사업'으로 간주하였고, 기후마커 표기를 전혀 표기하지 않은 사업은 '미표기(not screened)'로 간주하였음.

- ODA 주요 공여국의 세부 사업현황 분석을 위해 2014~2015년에 각 세부사업 내역이 보고된 총 195,506건의 세부사업을 활용하였음.
 - CRS에 보고된 세부사업별 공여기관, 사업 부문(sector), 사업 목적을 기입한 목적코드(purpose codes)등을 활용하여 공여국의 주요 지원 분야를 분석하였음.

- 연도별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2015년 미국 달러화 불변가격(constant prices)과 공여국의 약정액(commitments)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국제사회의 ‘기후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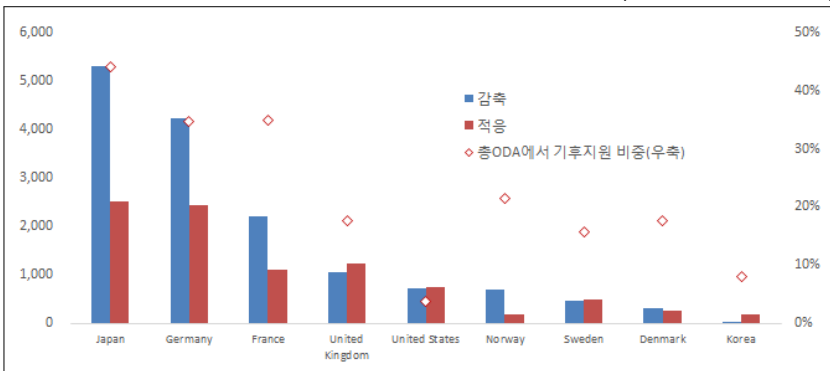
□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모두 종합한 지원 총액은 2014~15년 평균 기준 253.6억 달러로, 동 기간 전체 양자 ODA 지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변화 감축이나 적응을 양자 ODA 사업의 주목적이거나 부목적으로 명시한 주요 국가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임.

○ 적응보다 감축분야에 지원 사업이 많은 국가는 일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며, 감축보다 적응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많은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한국, 벨기에, 호주, 캐나다 등임.

〈그림 1〉 주요국의 기후변화 지원 현황(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 Stat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지원 현황(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기후변화 지원총계 (A+B+C)	감축 (A) ¹	적응 (B) ¹	감축과 적응 공통(C) ²	총 양자ODA (D)	양자ODA에서 기후변화 지원 비중 (A+B+C)/D	감축과 적응간 차이 (A-B)
Japan	7,522.0	5,015.5	2,216.8	289.7	17,051.9	44.1%	2,798.7
Germany	5,711.6	3,269.7	1,484.9	957.0	16,482.0	34.7%	1,784.7
France	2,853.7	1,755.2	647.7	450.7	8,152.2	35.0%	1,107.5
UK	1,502.0	275.9	441.5	784.5	8,524.7	17.6%	-165.6
US	1,093.1	343.1	381.3	368.7	29,326.6	3.7%	-38.2
EU	2,347.9	607.9	648.7	1,091.3	17,780.4	13.2%	-40.8
Norway	751.1	575.5	46.8	128.9	3,513.1	21.4%	528.7
Netherlands	685.0	59.6	494.7	130.7	4,225.3	16.2%	-435.1
Sweden	628.6	128.7	175.2	324.7	3,979.7	15.8%	-46.5
Switzerland	335.1	83.6	171.4	80.1	2,853.6	11.7%	-87.7
Denmark	316.4	70.5	11.2	234.7	1,803.3	17.5%	59.3
Australia	315.2	19.2	109.3	186.7	2,822.5	11.2%	-90.0
Belgium	284.7	30.8	130.9	123.0	1,272.2	22.4%	-100.1
Canada	221.9	29.1	102.1	90.7	3,310.3	6.7%	-73.0
Korea	183.5	12.1	152.0	19.4	2,287.2	8.0%	-139.9
Italy	166.4	33.8	10.9	121.8	1,646.3	10.1%	22.8
Spain	94.9	12.0	54.8	28.1	715.8	13.3%	-42.9
Finland	90.1	33.6	32.7	23.9	633.6	14.2%	0.9
Ireland	70.5	0.1	31.8	38.6	443.8	15.9%	-31.7
New Zealand	60.9	15.1	29.2	16.6	429.3	14.2%	-14.1
Austria	54.5	28.7	14.0	11.8	697.6	7.8%	14.7
Luxembourg	31.5	5.7	7.0	18.8	256.2	12.3%	-1.4
Portugal	15.7	12.1	0.8	2.8	208.6	7.5%	11.3
Iceland	9.1	0.2	4.5	4.4	30.0	30.2%	-4.4
Czech	5.3	2.0	3.0	0.3	63.3	8.4%	-0.9
Poland	3.0	1.1	0.9	1.0	106.5	2.8%	0.2
Slovenia	1.4	0.4	0.9	0.1	20.9	6.9%	-0.6
Slovak	0.2	0.0	0.2	0.0	16.7	1.4%	-0.1
Greece	0.2		0.0	0.2	55.0	0.4%	0.0
DAC Total	25,355.7	12,421.2	7,405.2	5,529.3	128,732.4	19.7%	5,016.0

주: 1. 감축 또는 적응 마커에만 각각 표기된 사업

2. 감축과 적응마커 모두에 표기된 사업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가. 감축 지원

□ 기후변화 감축 지원 총액은 2014~15년 평균 기준 179.5억 달러이며, 동 기간 전체 양자 ODA 지원의 13.9%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변화 감축을 양자 ODA 사업의 주목적이나 부목적으로 표기한 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31.1%), 프랑스(27.1%), 독일(25.6%) 등임.

- 감축 마커 지원 규모가 높은 상위 10개국의 경우, 총 양자 ODA에서 마커적격 지원액의 비중 평균은 15.9%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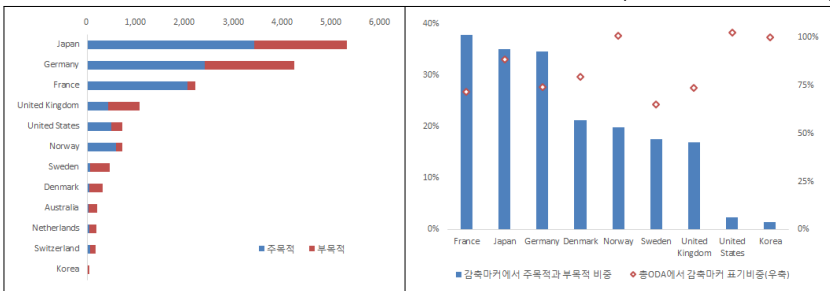
- 한국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축 마커를 표기하고 있으나, 양자 ODA에서 주목적이나 부목적의 비중은 1.4%에 불과함.

○ 감축 사업규모 상위 6개 공여국에서 영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는 기후변화 감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원액이 부목적인 경우 보다 많음.

- 감축 사업규모의 중위권 국가는 부목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더 많음.

<그림 2> DAC 회원국의 감축 지원 현황(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 Stat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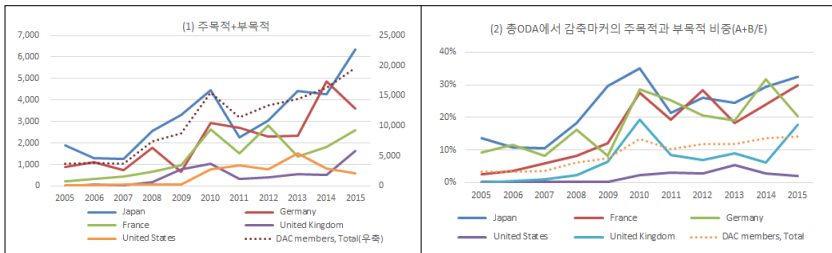
□ DAC 회원국은 지난 10년(2005~15년 기준) 간 감축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음.

○ 일본은 지난 10년 중 2014년을 제외하고 감축 사업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고려하는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양자 ODA 에서 감축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포함한 사업비중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DAC 회원국 역시 10%대로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음.

〈그림 3〉 DAC 회원국의 감축 지원 추이(2005~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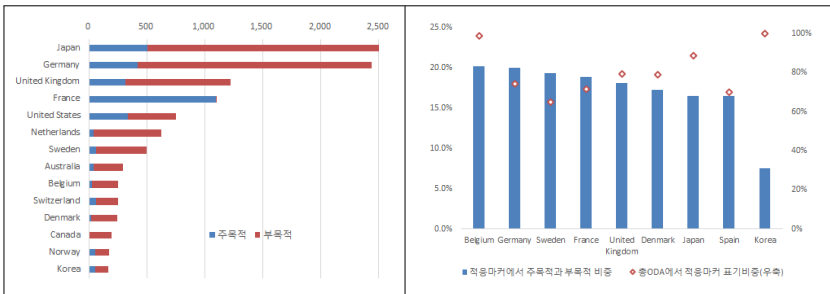
나. 적응 지원

□ 기후변화 적응 지원 총액은 2014~15년 평균 기준 129.3억 달러이며, 동 기간 전체 양자 ODA 지원의 10.0%를 차지함.

- 양자 ODA에서 적응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지원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 독일, 영국 등임.
- 적응 지원비중이 큰 국가는 벨기에(20.0%), 독일·네덜란드(14.8%), 일본(14.7%), 영국(14.4%) 등임.
 - 한국은 양자 ODA에서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적응을 고려한 비중은 7.5%로 감축마커의 표기보다 높게 나타났음.
 -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DAC회원국은 부목적으로 지원한 적응마커 표기사업을 시행중임.

〈그림 4〉 적응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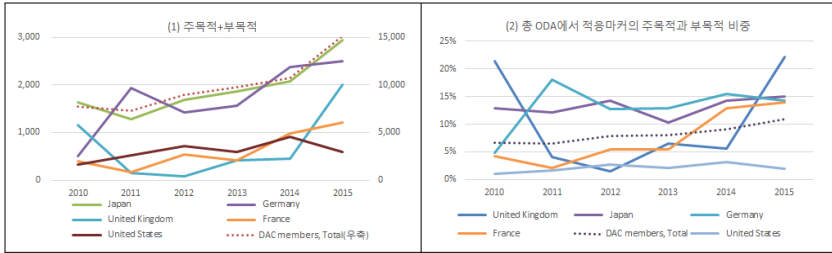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토대로 저자 작성

- DAC 회원국은 지난 5년(2010~15년 기준) 간 기후변화 적응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음.
- DAC 회원국 양자 ODA에서 적응을 주목적 또는 부목적으로 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로 2015년 11%를 기록함.

〈그림 5〉 적응마커 표기 추세(2010~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 Stat 토대로 저자 작성

3. 주요국의 기후 ODA 사업 심층분석

□ 2014~15년 기준 DAC 회원국 중 5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과 한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ODA 세부 사업을 분석하였음.

가. 기후변화 지원 전체(감축+적응)

□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에너지, 다분야, 수송, 물 공급, 농림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되었음.

○ 세부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철도수송(12.7%), 전력송배전(9.8%), 환경정책(7.6%), 재생에너지 발전(5.3%) 등임.

〈표 4〉 주요국의 기후변화 지원: 분야별 지원 규모(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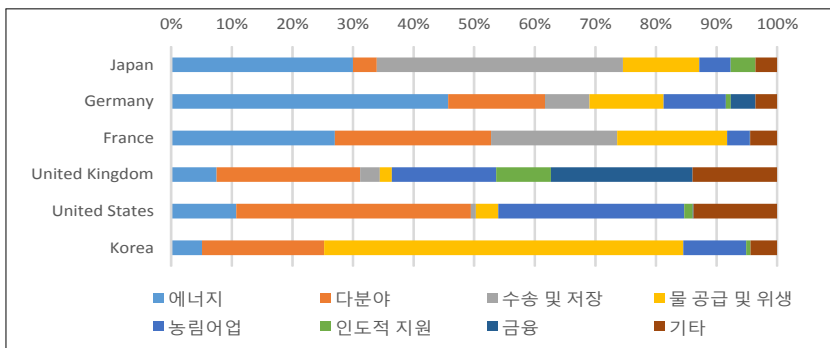
	DAC 회원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상위 5개국
에너지	6,248.9	2,255.6	2,611.3	770.4	112.7	117.4	9.3	93.9%
다분야	4,287.0	296.8	910.8	735.9	355.8	423.0	37.0	63.5%
수송 및 저장	4,149.5	3,053.9	421.9	593.2	48.5	9.2	0.0	99.4%
물 공급 및 위생	2,774.6	948.9	697.1	518.1	29.4	40.5	108.8	80.5%
농림어업	2,373.7	388.6	585.6	106.6	259.4	335.6	19.1	70.6%
인도적 지원	711.6	308.9	47.8	0.0	135.8	15.0	1.2	71.3%
금융	616.1	0.0	233.5	2.5	350.3	1.5	0.0	95.4%
기타	1,846.4	269.1	203.7	127.1	210.1	150.9	8.1	52.0%
총계	23,007.7	7,522.0	5,711.6	2,853.7	1,502.0	1,093.1	183.5	81.2%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 일본은 에너지와 수송 비중이 높고, 독일과 프랑스는 에너지와 다분야 지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한국은 물 공급 및 다분야 지원이 1.46억 달러로 전체 지원의 79.4%에 이르고 있음.

〈그림 6〉 주요국의 기후변화 지원: 분야별 지원 비중(2014~15년 평균)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감축 지원

- 2014~15년 DAC 회원국의 감축 관련 지원은 에너지, 수송 및 저장, 다분야, 농림어업, 수자원 분야에 제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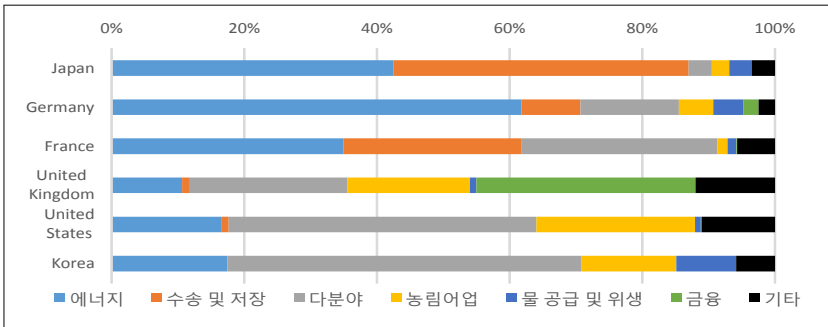
 - 세부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철도수송(17.9%), 전력송배전(13.8%), 환경정책(9.2%), 재생에너지 발전(7.5%) 등 상위 5개 분야가 감축 지원의 52.2%를 차지함.

-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수송 및 저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국과 미국은 각각 금융과 다분야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철도수송(42.3%), 전력송배전(18.0%), 천연가스 발전소(11.0%)가 감축 관련 사업의 71.3%(37.82억 달러)에 달함.
 - (독일) 전력 송배전,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에너지 정책이 감축 관련 지원 사업의 53.9%인 22.79억 달러에 이룸.
 - (프랑스) 총 22.06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 수송 분야가 전체 감축 사업의 25.3%를 차지함.
 - (영국) 주목적으로 표기된 사업에서 주요 분야는 환경정책이며, 부목적으로 표기된 사업의 주요 분야는 금융정책임.

- (한국) 다분야, 에너지, 농림어업, 수자원 분야를 주로 지원함.
 - 총 3,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정책(33.8%)과 도시 개발 분야(16.3%)의 지원이 전체 감축 사업의 50.1%를 차지함.

〈그림 7〉 주요국의 감축 지원: 분야별 지원 비중(2014~1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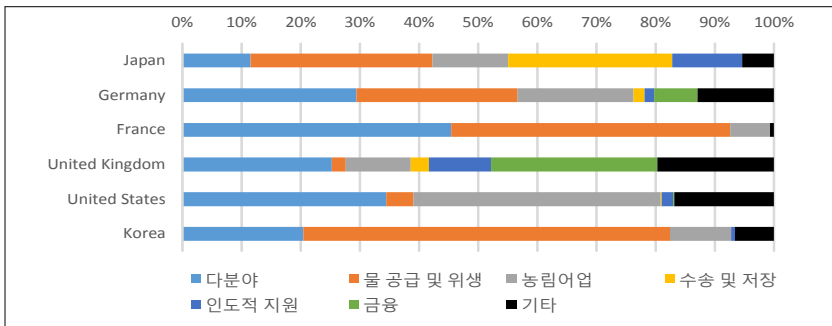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적응 지원

- DAC 회원국의 적응 관련 지원은 다분야, 물 공급 및 위생, 농림어업, 수송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음.
 - 세부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환경정책(9.7%), 농업개발(7.1%), 위생 (6.8%), 도로 수송(5.6%), 생물다양성(4.7%) 등임.
- 일본은 수자원과 수송 부문, 독일과 프랑스는 다분야와 수자원 부문의 지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 세부 지원분야는 도로수송(21.7%), 위생(20.6%), 재건 구호(10.1%), 농업 수자원(8.4%) 등임.
 - (독일) 생물다양성, 물 공급 및 위생, 환경정책, 수자원 정책 분야에 주로 지원함.
 - (프랑스) 위생, 환경정책, 도시개발, 물 공급, 수자원 정책에 지원함.
 - (영국) 환경정책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로 지원하였으며, 금융 정책 분야에서도 적응을 부목적으로 지원함.
- 한국은 수자원 부문과 다분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전체 적응 관련 지원의 82.4%를 차지하였음.
- 총 1억 7,1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자원보호(55.8%)와 홍수예방(8.8%) 지원이 적응 사업의 64.6%에 이르고 있음.

〈그림 8〉 주요국의 적응 지원: 분야별 지원 비중(2014~15년 평균)



자료: OECD.Stat 토대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DAC 회원국의 주요 기후 ODA 지원 분야 (수송, 에너지 등)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지원 규모는 미미한 상황
 - DAC 회원국은 교통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많고, 분석 대상인 주요 공여국 중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원이 두드러짐.
 - 그러나 DAC 회원국의 기후 지원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감축이나 적응 관련한 지원은 대체로 미미하고, 해당분야는 157개 국내 ODA지원 분야 순위에서도 중하위권에 속하거나 지원 사업이 없는 사례도 있음.
- 국제사회의 기후 ODA 지원이 많은 부문은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관련한 수요가 상당함을 내포하고 있음.
 - 전력 송배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발전 등 국내적으로 ODA 지원규모가 작은 분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기후변화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문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표 5〉 국제사회와 한국의 기후 ODA 지원 비교(2014~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DAC 순위	분야	DAC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한국 ODA	한국ODA 순위
1	Rail transport	2,914.2	2,244.3	111.0	557.9	0.0	0.0	0.0	177.1	2
2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2,248.7	952.9	886.8	263.9	28.2	3.9	3.8	4.0	64
3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1,748.0	127.4	266.8	226.4	235.6	8.7	10.9	18.5	29
4	Energy generation, renewable sources - multiple te	1,215.0	137.6	703.9	195.0	55.2	2.9	1.3	1.7	92
5	Sanitation - large systems	911.8	660.9	25.7	217.4	0.0	0.0	#N/A	#N/A	#N/A
6	Agricultural development	875.5	12.5	170.9	65.0	75.6	261.4	8.1	62.5	9
7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680.2	135.4	243.5	105.7	21.2	102.2	0.3	2.5	79
8	Road transport	658.0	543.5	41.1	27.7	37.6	0.0	0.0	423.7	1
9	Bio-diversity	622.1	3.9	386.2	100.5	0.2	114.9	0.0	0.1	149
10	Natural gas-fired electric power plants	585.5	585.5	#N/A	0.0	#N/A	0.0	0.0	0.1	150
11	Solar energy	499.5	0.9	445.4	34.9	#N/A	2.0	2.2	2.3	84
12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482.2	1.4	48.5	318.8	17.3	0.0	8.4	15.9	32
13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477.0	266.3	140.8	12.3	0.3	0.1	0.1	30.8	20
14	Water resources policy/administrative management	453.2	0.0	176.7	137.2	13.3	3.3	3.3	4.2	60
15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436.4	10.8	320.1	0.0	0.4	28.6	2.7	95.5	5
16	Multisector aid	398.8	52.9	70.4	0.0	0.3	41.7	1.5	20.6	24
17	Biosphere protection	398.0	4.4	32.1	37.7	9.8	253.6	0.6	0.6	110
18	Water supply - large systems	380.9	194.1	13.1	162.1	#N/A	3.2	0.0	0.2	135
19	Financial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367.6	0.0	12.0	#N/A	350.2	0.1	0.0	2.3	83
20	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315.0	252.8	25.6	0.0	25.0	0.0	0.1	4.7	57
21	Hydro-electric power plants	268.3	103.3	89.9	57.1	#N/A	1.3	0.0	40.4	16
22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259.6	0.0	19.5	0.0	3.1	1.4	0.0	4.8	56
23	Rural development	257.9	0.1	77.4	19.9	13.7	0.0	0.2	40.4	17
24	Transport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255.9	2.7	214.3	7.5	10.8	8.8	0.0	10.0	37
25	Formal sector financial intermediaries	242.6	#N/A	221.5	2.5	0.1	#N/A	0.0	0.0	154
26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230.6	15.3	102.7	0.1	13.0	4.2	6.8	19.9	26
27	Geothermal energy	221.4	81.3	78.5	54.8	1.4	1.3	#N/A	#N/A	#N/A
28	Forestry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205.8	19.6	51.3	3.3	101.7	0.6	1.8	5.9	51
29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183.4	56.1	17.0	0.0	22.5	2.2	1.1	2.4	82
30	Coal-fired electric power plants	175.5	174.8	0.0	#N/A	#N/A	0.0	#N/A	#N/A	#N/A

주: 분야별로 주요 공여국(5개국) 중에서 지원이 많은 국가의 규모에 푸른색 영역으로 표시

자료: OECD, Stat 토대로 저자 작성

IV. 주요국의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

1. 일본

- 일본은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¹⁶⁾에 지구온난화와 환경을 우선순위로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장기간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이슈로 다루어왔음.
- 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산림·농경지·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물다양성 보호, △건강한 물순환 촉진, △환경 관리 및 기타 관련 이니셔티브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함.
- OECD 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설문조사(2016)¹⁷⁾에 따르면 기후변화 측면에서 일본은 ‘Actions for Cool Earth 2.0 (ACE 2.0)’ 정책을 발표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지진, 쓰나미 등 자국의 자연재해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지원사업에서 재해위험 완화를 주류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개발정책에 재해위험 완화 관점을 도입함과 동시에, 재해 복원력있는 사회 건설과 인명 보호를 중시함.

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17) OECD DAC ENVIRONET (2016).

□ 일본의 대표적인 원조 실행기관인 JICA는 2016년 9월 정부의 기후 변화 연관정책에 부합하는 기관차원의 ‘기후변화협력전략(Climatic Change Cooperation Strategy)’¹⁸⁾을 수립하였음.

○ 동 전략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분야를 강조함.

- 저탄소, 기후-복원력 있는 도시개발 및 인프라 투자 촉진
- 종합적인 기후위험관리능력 향상
- 기후정책 및 조직의 발전 지원
- 산림 및 기타 생태계의 관리와 보호 강화

○ 협력 접근법으로 △SDG와 기후변화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일본 우수 기관의 기술 등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 전략서는 JICA 기후변화 협력 활동사례를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사업명, 지원방식, 특징 등을 기술하여 전략 활용의 이해도를 높임.

□ 일본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원조기관 차원의 주류화 목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OECD DAC 회원국 중 기후변화 주류화의 성공적 사례로 논의됨.¹⁹⁾

18) JICA (2016).

19) OECD DAC (2014a), p.15.

- 일본 외무성과 JICA는 환경관련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통합함.
 - 일본 외무성은 ODA 정책 전반에 대한 환경적 고려를 강조하는데, 특히 지역·국제적 환경 이슈 관련 모든 ODA 사업에 있어 사회·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JICA는 정책문서에서 1) 개도국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국제 협력과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2) 사회·환경적 고려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을 명시함.

2. 독일

- 독일은 개발정책백서(2013)²⁰⁾상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5대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빈곤감소, 거버넌스,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은 독일 ODA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특히 기후변화는 독일 개발협력정책에서 범분야 이슈로 다뤄짐.
- 독일의 환경분야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²¹⁾

20) BMZ (2013).

21) OECD DAC ENVIRONET (2016).

- 분야별 프로그램(예: 농업, 어업, 임업)과 범분야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감소,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에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호 통합화 및 주류화
 -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참여 확대
 - 산림보호, 지역 재건, 개도국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D)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재원 제공,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특히 독일은 생물다양성과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바, 2013년부터 매년 5억 유로를 전 세계 산림 및 기타 생태계 보호에 지원함.
- 타 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언급함.
- ‘존엄성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강조하며,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측면에서 젠더 특화된 기후변화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함.
 - 농촌개발, 농업,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 과제로 인식하며, 신흥국과의 개발협력 시 파트너십 구축의

3대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환경보호를 선정함.

□ 독일은 2017-18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SDG·파리협정·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정책 및 운영 체제의 일관성 확보를 제시²²⁾함.

□ SDG 및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는 ‘지속가능개발전략(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내각의 승인을 얻어 공식 발효²³⁾함.

○ 동 전략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독일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36개 세부분야별 목표와 주요 지표를 설정하였음.

- SDG 13 관련,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40%이하로 줄이고, 기후재원 규모를 현 수준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공약함.

□ 개발협력사업 내 환경 이슈의 주류화 성공 사례로 독일 원조시행 기관인 GIZ의 국제적 연대와 파트너십 구축 지원활동이 “책무성” 구축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어 오고 있으며,²⁴⁾ 독일은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성공사례 공유 및 확산에 집중하고 있음.

22) OECD DAC ENVIRONET (2016).

23)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16).

24) OECD DAC (2014b), p.27.

- 독일은 협력국가의 환경적 리스크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규명, 다양한 정책단계에서의 환경 정책 현대화 작업보조, 지역간 환경 협력 조인, 타 정책분야에 환경보호 내재화 전략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함.

- 주류화 노력 차원에서 2011년 독일은 BMZ와 개발협력 수행 기관 들은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기후확인(climate check) 제도를 의무 화하도록 함.²⁵⁾
 - 기후확인 제도는 1) 유형화, 2) 위험식별, 3) 위험평가, 4) 위험 관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

 - 동 제도 수립의 목적은 1) 환경에 대한 유해한 결과를 감소 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2) 프로젝트의 이행 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3) 기후변화의 결과가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려는 긍정적 성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임.

 - 기후확인 제도의 결과는 프로젝트 관련 주요 문서(예를 들어, 우선순위분야 전략서, 프로그램 제안서 등)에 포함되며, 향후 개발협력 사업시행기관들이 해당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 참고할 수 있음.

25)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11), p.38.

3. 프랑스

- 프랑스 개발협력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문서인 ‘개발협력 프랑스의 비전(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²⁶⁾은 기후변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재원마련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음.
- 기후변화는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6대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며, 관련 법과 정책이 정비되었음.
- 2030 의제 및 파리협정, UNCBD 및 UNCCD 관련 주요 합의문의 내용을 향후 환경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프랑스 원조 실행기관인 프랑스개발청(AFD)은 ‘2012~2016 기후와 개발 개입 프레임워크 (Climate and Development Intervention Framework)’를 수립, 원칙과 우선순위 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²⁷⁾함.

26)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2011). 동 비전 문서는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프랑스 개발협력정책의 네 가지 전략적 도전과제와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전례 없이 명백하고 일관된 국제협력 비전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OECD DAC (2013b). p.17).

27) AFD의 기후와 개발 개입 프레임워크는 다음을 참고:

<https://www.afd.fr/sites/afd/files/2017-09/cadre-intervention-climat-note-generale.pdf>
AFD의 행동계획은 다음을 참고: AFD, 2011, Reconciling development and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2~2016, (http://www.afd.fr/webdav/site/afd/shared/PORTAILS/SECTEURS/CLIMAT/pdf/Climat_GB_HD.pdf)

□ AFD는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지속적인 기후재원 공약 이행을 위해 AFD 재원의 50% 이상, PROPARGO 재원의 30% 이상을 기후재원으로 배분

○ 둘째, 지원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 셋째, 사업 선정단계부터 지원사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

□ AFD 기후변화부서(Climat Change Division)는 2012년부터 기후 변화 주류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발자국 측정도구를 도입, 모든 지원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을 사전에 예측²⁸⁾함.

○ 사업 심사(appraisal) 이전 발굴(identification) 단계부터 탄소 발자국 추정치를 제출하도록 함.

○ AFD는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에 따라 지원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표를 고안하였음.

- AFD 운영지침, 수원국의 발전정도, 수원국의 기후변화 전략, 프로젝트의 탄소발자국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프로젝트를 고려

28) Bonnel, A. and S. Swann (2015). Annex B, p.29.

〈표 6〉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AFD 지원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최빈국 또는 취약국	중소득국	신흥국
감축 사업 또는 배출량 10ktCO ₂ e 이하의 사업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가능
배출량 10ktCO ₂ e ~ 1MtCO ₂ e인 사업	지원 가능	지원 가능	비양허적 지원 가능 단, 수원국이 기후정책을 수립한 경우, 양허적 지원 가능
배출량 1MtCO ₂ e 이상의 사업	수원국이 기후정책을 수립한 경우 양허적 지원 가능	수원국이 기후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자료: Bonnel, A. and S. Swann (2015), Annex B, p.29.

4. 영국

- 파리협정 채택 이후 영국은 개도국의 저탄소·기후복원적 성장, 개발 프로그램과 기후/환경의 통합적 접근법 강화, 기후재원 확대와 기후 통합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참여자의 효과적 수행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기함.
- 영국의 원조 전략은 △세계평화·안전·거버넌스 강화, △복원력과 위기 대응 강화, △세계의 번영 촉진, △극빈 퇴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영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달성 목표로 수립하였음.²⁹⁾

29) HM Treasury · DFID (2015).

- 복원력 강화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영국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기후 스마트 접근법을 적용하여 모든 지원활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여 개도국이 저탄소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
- 영국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약 87.8%를 집행하는 국제개발부(DFID)는 영국 원조 전략과 일치하는 중장기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여 기후 복원력 강화 전략에 일조함.
 - DAC 동료평가(2014)에 따르면 DFID는 빈곤퇴치 및 MDGs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2011~2015년간 DFID의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6대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³⁰⁾함.
 -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는 개도국의 저탄소성장을 돕기 위해 최소 두 개의 수원국에 매년 기후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기후 스마트한 DFID 프로그램을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한 기후 위험과 기회요소를 파악하도록 함.

30) OECD DAC (2014a), p.35.

- 영국은 기관차원에서 기후변화 성과에 대한 높은 책무성을 갖고 있으며, 전략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류화 학습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³¹⁾
- 책무성 확보차원에서 DFID의 모든 업무부서는 사업에 대한 기후 변화 위험 및 기회요인(Opportunities and Risks from Climate Change and Disasters)을 규명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 검토서 (Strategic Programme Reviews) 작성을 의무화함.
 - 이에 따라 개도국 협력사업 수행시 수원국으로부터 저탄소 에너지원에 투자하고, 가능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개발전략을 채택하도록 돕고 있음.
- 또한 DFID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저탄소성장 지원 공약 달성도를 추적하기 위해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를 고안하였음.
 - 여기에는 적응 프로그램 지원 규모, 기후 영향력을 다루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인력 수, 청정에너지 지원 규모, 프로젝트 성과로 청정에너지에 접근성이 개선된 수혜자의 수 등의 지표가 있음.

31) OECD DAC (2014a), p.27, p.32, p.36.

5. 미국

- 미국은 외교·개발활동 지침(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³²⁾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4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하는 등, 기후변화를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과제로 제시하였음.
- QDDR은 활동의 주체로서 미 국무부와 USAID 등을 언급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 양자 및 다자지원 확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³³⁾하여 미국 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완화 등,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무효화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국제협력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³⁴⁾
- USAID는 당초 2012-16년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던 기후변화·개발 전략을 2018년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임.

32) US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5).

33) The White House (2017).

3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하여 USAID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예산삭감 예정임.

- 미국 USAID는 기후변화를 다방면에서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여, 기후변화 요소를 모든 협력 사업에 통합하는 접근법으로 주류화를 추구하고 있음.
- 기후변화를 ‘개발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이자 개도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함.
- 2012년 발표된 USAID의 ‘기후변화와 개발 전략’³⁵⁾은 ① 청정 에너지·지속가능한 자연경관 투자를 통해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 ② 적응에의 투자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복원력 제고, ③ 계획, 학습, 정책, 운영 등에서 기후변화를 통합하여 개발성과 강화를 세 가지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s)로 설정함.
-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 통합 방안으로는 △기후위험 관리 △추진 사업의 기후변화 통합 현황 평가 △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관련 지식이전을 포함하는 활동 등이 있음.
- 2014년 발표된 USAID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³⁶⁾는 기존의 사업 계획 및 결정절차에 기후변화 요소를 통합 및 포함, 즉 ‘주류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35) USAID (2012).

36) USAID (2014).

- 기후변화가 통합·포함·주류화된 ‘기후복원적 개발 프레임워크’는 △사업범주 파악 △현황(기후 관련 포함) 파악 △활동 계획 수립 △이행·관리 △평가·수정의 다섯 단계로 체계화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사업 분야별로 제시하여 사업이행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시사점

- 파리협정 채택과 SDG의 도입을 계기로 주요 공여국은 개발협력백서, 헌장, 대통령행정명령 등을 통해 기후변화 지원 정책을 수립·공표함.
- 기후 ODA 상위 공여국은 기후변화를 개도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
- 원조 시행기관은 정부의 기후변화·국제개발협력 통합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전략목표 달성 현황 모니터링과 기후재원 통계 수집을 위해 실용적인 리우마커 표기 가이드라인 및 기후재원 측정법 등을 구체화하였음.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에는 원조기관 차원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국제협상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기술적 논의가 함께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은 기후위험 인식을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의 첫 단계로 보고, 설계단계부터 지원사업의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 평가를 실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마련함.

□ 주요국 원조 실행기관은 기후변화 특화 성과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활용,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평가함.

〈표 7〉 주요국의 기후변화 · 개발협력 전략

국가	국가 차원의 전략 문서	기후변화관련 내용	실행기관 차원의 전략
일본	개발협력헌장 (2015)	- 정책 우선순위에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실행원칙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함.	JICA 기후변화협력전략(2016)
독일	개발정책백서 (2013)	- 지속가능한 저탄소개발이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포함. - 기후재원 제공, 리스크 관리, NDCs, 재생에너지를 개발협력 활동 우선순위 명시	GIZ는 모든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후확인('climate check') 제도 운영
프랑스	개발협력: 프랑스의 비전 (2011~2020)	- 6대 정책일관성 우선순위 과제로 기후변화가 포함됨.	AFD는 2012~2016 기후와 개발 사업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고, 원칙, 우선 순위 전략, 행동계획 제시
영국	UK Aid (2015) 원조 전략문서	- 원조전략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을 통한 '복원력과 위기 대응 강화'를 달성목표로 설정	DFID는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요인을 규명하고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ORCHID' 제도 실시함. 또한 포트폴리오에 기후스마트 접근법 적용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2014) 외교개발활동 지침(2015)	- 기후복원력을 모든 대외원조 활동에 통합 - 4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 포함.	USAID 기후변화 개발 전략서 상 기후변화 전략목표 설정

자료: 저자 작성

V.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1.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기후변화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별도의 개발협력 전략 또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가차원의 최상위 문서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또는 중점 지원분야로서 기후변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 그러나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제3조) 중 하나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간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중기 전략 성격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2030 개발의제 채택 및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비전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제시하고, 'SDG 이행목표 달성 기여'를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 기후변화는 SDG의 13번 목표에 해당되며, 타 세부목표의 기후 변화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중기 목표에 일부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계획은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인 재원에 대한 배분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SDG 방향에 부합하는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였음.³⁷⁾
 - 기본계획의 3대 원칙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 하는 ODA’으로 기후변화는 내실있는 ODA 원칙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에서 언급되어 있음.³⁸⁾
 - 사업절차 개선 중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강화 분야에서, 기후 변화가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국제기구,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 발굴시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됨.
- 연간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ODA 사업 영역 확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함.
- 2017년 계획의 7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ODA 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분야에 반영되어 있음.
 - 7대 주요과제는 ①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 없는 추진, ② 다자 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 ③ 다양한 ODA 사업 신규 발굴 및

37) 관계부처 합동 (2015). p.41.

38) 관계부처 합동 (2015). p.58.

추진, ④ ODA 평가 제도 개선, ⑤ 협업 및 정보공개 강화, ⑥ 범국민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⑦ 국제적 위상 제고로 구성됨.

□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립된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개도국의 SDG 이행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ODA 예산을 관련 분야 지원에 집중 배분하기로 함.

□ 우리나라 무상 증여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강조 추세와 그에 따른 녹색 ODA 확대 기조와 더불어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환경 주류화 개념을 KOICA 조직 및 제도, 사업 수행절차 차원에서 구체화하였음.

○ 2012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국별 전략수립을 포함,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환경 주류화를 위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음.

□ 최근 KOICA는 분야별 중기전략(2016~20)을 발표하였는데, 기후 변화는 10대 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②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③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의 전략 목표를 제시함.

- 새로운 전략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발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기후위험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중기운용계획(2008~2012)에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체평가 이행과제로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설정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수의 사업이 발굴 및 승인됨.
- EDCF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운용계획(2018~2020)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중 관련 사업 확대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기후변화 관련 세부 사업분야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에너지효율화(송변전, 스마트그리드), 수송(고속철, 메트로, 전기차, CNG 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이 있음.

2.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과제

-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최상위 전략 또는 정책문서에서 기후변화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주류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파리협정 채택과 2030 개발 의제 채택을 계기로 개발협력헌장, 개발협력백서, 대통령행정명령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최고의사결정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함.
- 범부처 차원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ODA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ODA 실행기관이 사업발굴부터 프로젝트 전 주기에 걸쳐 수원국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도록 기후 주류화 인지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시급함.
- 국가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했던 시기에는 중기 전략 및 실행 기관의 전략 상 기후변화 대응이 강조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대응은 개도국 SDG 이행 지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 중임.
- 이러한 가운데 원조 실행기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중기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요국 및 국제기구가 본격적으로 실행 중인 기후위험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실시가 필요함.
-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리우마커에 대한 이해 수준이 실행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리우마커 활용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리우마커 통계 수치는 각국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력을 파악하고 상호비교하는 데 활용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관심과 지원현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리우마커 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후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설계 단계부터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고,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프레임워크를 마련, 우리나라가 지원한 기후 ODA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기후 ODA 사업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야 함.

VI. 결론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개도국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으며,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 활발히 참여하며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후 ODA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임.

- 리우마커로 측정된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2014~15년 평균 1억8,350만 달러로 DAC 회원국 중 15위이며, 양자 ODA 중 지원비중은 8%로 DAC 평균인 19.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세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ODA 사업은 기후변화 위험, 취약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실행원칙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위험 및 취약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후위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사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도록 성과프레임 워크를 마련해야 함.

- 기후위험 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후변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선진 공여기관과 같이 기후 위험 및 취약성 분석의 예비 단계로 활용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데, ODA 실행기관을 대상으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가 필요함.

- 무엇보다 기후변화 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 확대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파리협정 이행 노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재원 통계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리우마커 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상 Annex II 국가는 아니지만, DAC 회원국으로서 DAC이 정한 정책마커 통계 수집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2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2015.11.10.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2013).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1.
- KOICA (2017). 기후변화 대응 중기전략 2016-2020.

해외문헌

- AFD (2015). “2015 Results of the AFD Group’s Activity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 BMZ (2013). The German Government’s 14th Development Policy Report: Development Policy White Paper.
- Bonnell, A. and S. Swann (2015). Mainstreaming Climate Action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Emerging Practices.
- European Commission (2013). Regulation (EU) No 130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11). “Adaptation Action Plan of the German Strateg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16).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
- Gupta, J. (2010).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 Theoretical Exploration.”, in eds. J. Gupta and N. van der Grijp,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ory, Practice, and Implications for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HM Treasury·DFID (2015).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 JICA (2016). Climate Change Cooperation Strategy (검색일: 2017.7.6.)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climate_change/c8h0vm0000bc50q3-att/strategy_01.pdf

Mani, M. and A. Markandya (2008).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Support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in Development Programs: A Practical Guide. Washington, D.C.: World Bank.

MDBs and IDFC (2015). Common Principles for Climate Mitigation Finance Tracking
http://www.eib.org/attachments/documents/mdb_idfc_mitigation_common_principles_en.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OECD DAC (2002). Policy Statement on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 DAC (2006). Declaration on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2009). Policy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2013a). “Climate Adaptation Marker: Quality Review.”

OECD DAC (2013b).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France 2013.

OECD DAC (2014a). “Mainstreaming cross-cutting issues: 7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OECD DAC (2014b).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Kingdom.

OECD DAC (2016). Handbook: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OECD DAC ENVIRONET (2016). “Summary of Responses to the DAC ENVIRONET Survey 2016 of Members’ Priorities and activities.” DCD/DAC/ENV/RD(2016)1.

OECD ENVIRONET·WP-STAT (2013). OECD ENVIRONET and WP-STAT Workshop on Rio Markers,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 “Main Points of Discussion.” June 24-25, 2013, Paris.

OECD ENVIRONET·WP-STAT Task Team (2015). “Fourth Experts’ Meeting of the Joint ENVIRONET-WP-STAT TASK TEAM on OECD Rio Marker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OECD ENVIRONET-WP-STAT TASK TEAM : M(2015)3- FINAL.

The White House (2017).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EO 13783.

UNFCCC Secretariat (2017). Modalities for the accounting of financial resources provided and mobilized through public interven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7, of the Paris Agreement: Technical paper by the secretariat.

USAID (2012).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Strategy 2012-2016.

USAID (2014).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US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5).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Enduring Leadership in a Dynamic World.

온라인 자료

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Principles for Mainstreaming Climate Action 홈페이지

(<https://www.mainstreamingclimate.org/workstreams/>)

OECD Stats. Database. (검색일: 2017.05.18~11.15)

EDCF

III. 한국의 개발협력

ODA 국가협력전략(CPS)의 의의와 향후 운영방향
곽상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와 EDCF의 과제
조정화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장

ODA 국가협력전략(CPS)의 의의와 향후 운영방향

곽상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

목 차

- I. CPS 개관
 - II. 현행 CPS의 한계
 - 1. 비탄력적인 CPS 수립주기
 - 2. 실제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 3. CPS에 기반한 ODA 사업 검토 및 평가 체계 부재
 - 4. 다른 외교·대외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 III. CPS 실효성 제고방안
 - 1. 정기적 중간점검을 통한 CPS 보완
 - 2. CPS 내용의 구체성 강화
 - 3. 시행계획 수립시 CPS에 기반한 사업 검토 실시
 - IV. CPS 향후 운영방향
- 참고문헌

I. CPS 개관

우리나라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경제발전은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말로 자주 표현된다. 이제는 다소 식상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 표현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이 문구에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서 공여국이나 수원국이나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구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른바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인 남남협력(South-South Economic cooperation)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세기'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나라의 ODA의 역사가 그만큼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원조의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1987년에 설립되었고, 무상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1991년에 설립되었으니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역사는 30년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14년이 지난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만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 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며 국민들의 OD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여타 선진 공여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운용 중인 ODA 관련 전략으로서는 유일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작업 끝에 나온, 완결성이 있는 전략이기는 하나 아직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CPS는 우리나라가 OECD DAC 회원국이 된 직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정책관실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유무상 전략을 통합하는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를 마련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이전에도 ODA 전략이 있었으나 유상과 무상 주관 기관별로 별도로 마련되었으며 유무상의 전략적 연계성 등이 없어 범정부차원의 ODA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성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ODA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별 통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1년여의 작업을 거쳐서 2012년 제1기 중점협력국 국가협력 전략이 발표되었다. 당초 일부 부처에서는 CPS를 협력대상국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력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를 공유기로 하였고 CPS의 내용에도 협력국 정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립주기는 우리나라와 협력국 간의 ODA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정하였는 바, 제2기 CPS는 2016년 수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ODA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점 협력국도 일부 조정하게 되었다.

II. 현행 CPS의 한계

총 24개국에 대한 CPS를 수립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전략적 OD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CPS 수립,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서 아직 한계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 비탄력적인 CPS 수립주기

CPS가 정책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국의 정책방향, 경제상황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시성 있는 분석·검토가 전제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존에 1기, 2기 CPS 수립 시 대상국의 경제정책을 충분히 분석·검토하였고 현 CPS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나,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다 보니 협력국의 정권교체, 경제환경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CPS 수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협력국 내에서 대선 등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책방향이 큰 폭으로 바뀐 경우에도 우리나라 ODA 사업은 기존의 CPS에 기반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전략이라는 것을 매년 수시로 수정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으나,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CPS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체제 하에서는 2년도 안되는 시간 내에 24개 중점협력국 CPS를 동시에 수립하고 있어서 검토과정에서 중점협력국이 재조정될 경우 수립이 지연되어 전략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2010년 처음으로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으나 이들 국가에 대한 CPS는 2013년에 가서야 작성되었고, 2015년 중점협력국이 일부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CPS 수정은 2016년 말에야 완료되었다.

2. 실제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CPS상에는 협력분야 이외에 세부 사업명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국과의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ODA 정책의 방향성은 있으나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CPS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협력국의 요청에 기반하여 양국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

물론, ODA 사업이라는 것이 공여국-수원국간 재원이 이전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은 수원국 국민과 관계기관의 수요, 경제·사회적 환경, 공여국의 지원 여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등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중장기적·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협력국과의 관계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3. CPS에 기반한 ODA 사업 검토 및 평가 체계 부재

우리나라는 주요 ODA 선진국들과는 달리 개별 ODA 사업은 단일 기관이 아닌 부처별·기관별로 추진하는 체계이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기관이나, 실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주체는 개별 시행기관이며 주관기관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CPS가 ODA 사업 추진의 전략적 기반 또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예산당국이나 국회로 제출되기 전 각 사업시행 기관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CPS에 기반하여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진행중 또는 종료 후에도 CPS에 기반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도 CPS가 사업기획단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개별 사업이 CPS를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지, 전략의 기본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략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주관기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동 사업이 전략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4. 다른 외교·대외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현행 CPS는 ODA 주관기관·시행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먼저 초안이 작성되고 이후 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CPS는 ODA 관련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ODA 정책결정의 최상위에 있는 정책 지침으로서의 완성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ODA 관련기관 및 부처들을 중심으로 CPS가 작성되다보니 다른 외교·대외정책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ODA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대외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외교,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핵심부분으로서의 역할도 있다. 현행 CPS도 이러한 다른 외교·대외전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활용단계에서는 개별 ODA 사업에서의 전략지침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즉 CPS가 협력국 앞으로 ODA사업의 비전과 전략은 제시하고 있으나, 대외경제정책은 기재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그리고 일반적인 외교정책은 외교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전략들간의 공고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III. CPS 실효성 제고방안

앞서 언급한 CPS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PS의 정기적인 중간점검, CPS 내용의 구체성 제고, CPS에 기반한 사업검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기적 중간점검을 통한 CPS 보완

국가별 CPS가 협력국의 정책 및 정치·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CPS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24개국 전체 CPS를 일률적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면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력국내의 변화를 CPS에 적시성있게 반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협력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선행조사를 통하여 협력국내 정권교체, 정책방향 전환 등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국가만을 선정한 이후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소위원회 2018년 과제로 CPS 중간점검을 선정하였다. 정권교체나 정책변화가 있는 국가들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주요 공관 등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하반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CPS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CPS

중간점검을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매년 추진하여 CPS의 전략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2. CPS 내용의 구체성 강화

현행 CPS는 협력국내 현황 분석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가별 중점협력분야를 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ODA 전략과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중점협력 분야로 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등을 정하고 협력국의 동 분야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 우리나라 ODA 지원 역량 및 전략 등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완결성이 있으나, 향후 세부 ODA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력국 입장에서도 CPS에 세부 예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ODA 사업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고, 예산당국 및 국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5년을 시계로 한 사업들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과정에서 CPS상의 사업에 구속되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CPS상의 사업은 OECD DAC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의 목적 코드(purpose code)의 대분류를 기초로 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제시하되 해당분야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야별로 예시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OECD DAC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으로 CPS 상의 중기재원 계획은 추정치로만 되어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재원 계획은 ODA 분야로만 한정하여 짜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맥락 속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시행계획 수립시 CPS에 기반한 사업 검토 실시

현재의 ODA 사업심의는 주관기관 중심으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상원조관계부처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후 예산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2017년까지는 주로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 위주로 이루어 지다보니 CPS에 기반한 전략검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CPS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검토는 이루어졌으나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인지의 여부를 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CPS의 방향성과의 부합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시행계획부터 세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ODA 사업시행기관이 CPS에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ODA 개별사업들 중 CPS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외교 및 대외경제정책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계획이다. 즉 CPS에 기반한 전략검토가 사업 자체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중점협력국에 ODA 재원의 70%를 집중한다는 ODA 기본계획의 이행을 목표로 ODA 사업시행기관들이 CP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기획할 수도 있도록 유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V. CPS 향후 운영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DA를 포함한 외교·대외경제정책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성이 없고 상호간에 긴밀히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교·경제·개발협력을 포괄하는 국가별·지역별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 하에서 ODA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른 외교·대외경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정부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들 간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시간적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CPS와 다른 대외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CPS를 운용하는 ODA 담당부처와 다른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간의 체계적인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의결하는 정책 중 ODA와 관련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확립될 경우 ODA 정책과 다른 대외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경영전략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효과성(operational effectiveness)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략적 포지셔닝(strategic positi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DA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개별사업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나, 전체 ODA 정책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달성을 위해 하위의 ODA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대외 정책이 SDG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과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1호). 관계부처 합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관계부처 합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a).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제26-2호). 관계부처 합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b).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제28-3호). 관계부처 합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8).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3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0-1호). 관계부처 합동.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해외문헌

-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와 EDCF의 과제¹⁾

조정화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장

목 차

- I. 들어가며
 - II. EDCF에 대한 동료검토 내용
 - 1. 2012년 동료검토 이행 성과
 - 2. EDCF 방문 결과
 - 3. 수원국 캄보디아 방문 결과
 - 4. 혁신주제 발표: PPP를 통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
 - III. 한국 ODA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
 - 1. 한국의 개발협력 평가
 - 2. 권고사항(12개)
 - IV. EDCF의 향후 과제
 - 1. 전략적 성과 관리 및 평가
 - 2.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 3.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 4.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V.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1) 이 논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8년 제1호 국제개발협력'에 기 게재된 원고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됨(원고명: EDCF가 바라본 2017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주기적인 동료검토(peer review)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 5년마다 한번씩 각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시행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로 대략 일년에 6개 정도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OECD DAC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2017년 6월 한국을 방문하여 관계기관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이후 보충 설명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료검토를 진행하였다. OECD DAC은 2017년 12월 파리에서 동료검토 최종회의(review meetin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2018년 2월 7일 서울에서 OECD 관계자, 한국 정부, 원조시행기관,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료검토 보고서의 발간 행사를 가졌다.

2017년 동료검토는 한국이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동료검토였다. 이번 동료검토는 2012년 동료검토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동료 회원국들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욱이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설립 30주년을 맞는 해에 실시되었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 동료검토는 한국 정부, 원조시행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동료검토에서 나온 평가 내용과 권고 사항도 여러 기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이나, 본 원고는 EDCF 입장에서 동료검토 결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EDCF가 받은 동료검토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ODA 전반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 다음,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따른 EDCF의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본다. 다만, 이번 동료검토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원고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EDCF의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II. EDCF에 대한 동료검토 내용

1. 2012년 동료검토 이행 성과

2012년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EDCF에 해당되는 사항은 (i)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환경 및 기후변화 등의 이슈 주류화, (ii) 취약국 등의 경제 상황과 재정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iii)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기 원조 계획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EDCF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해 왔다. 그중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은 EDCF 세이프가드 수립, 성 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 제정, EDCF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국별 프로그래밍 체제 도입 및 시행 등이다.

먼저, EDCF는 4년이 넘는 개발 과정을 거쳐 2016년 2월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다. 세이프가드는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에 따른 환경 사회 영향 및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원국이 적절한 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한다. EDCF는 차관 신청서 접수 시부터 대상 사업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수원국이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또는 기초환경 사회조사서(Initial Environmental and Social Examination: IESE)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EDCF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영향심사를 실시하고, 수원국이 적절한 환경 사회 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케 한 후 저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EDCF는 양성평등 증진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반영하여 '성 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을 2016년 5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DCF는 단기적으로 성 주류화가 용이한 분야(교육, 보건, 수자원 등)에 성 인지적 관점을 우선 적용하고 있고, 또 사업 준비, 심사, 모니터링, 평가 등 각 사업 단계마다 양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EDCF는 취약국에 대한 원조 제공 시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거버넌스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동료검토 권고에 따라 'EDCF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7년 5월에 수립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EDCF 자체 취약국 선정 기준, 취약국 지원 원칙 및 세부 이행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수원국의 취약성에 따른 사업 지연, 불필요한 분쟁, 사업 효과 저해 등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EDCF는 중기 원조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라는 2012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별 프로그래밍 체제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DCF는 주로 중점 지원국을 대상으로 중기 후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 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 G2G) 차원의 프로그램 미션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미션 시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 수요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진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국의 개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수원국과 EDCF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3년) 후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함으로써 EDCF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EDCF 방문 결과

OECD DAC 사무국과 2개 회원국 대표(뉴질랜드, 미국)로 구성된 검토단은 2017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1주일(2017.6.19~6.23)에 걸쳐 관련 정부 부처·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검토단은 EDCF를 방문하여 대략 12개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고, 그 중 빈곤층 친화적인 성장 지원 방법, 최빈국 지원 비중의 확대 필요성 및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먼저, 검토단은 지원사업 선정 시 빈곤층 친화적인 성장(pro-poor growth)을 고려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EDCF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재정사업을 선정하여 고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한다고 답하였다. 수원국 재정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업성이 없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투자 사업이면서 주로 개발 소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검토단은 OECD DAC의 최빈국 지원 확대 공약²⁾을 언급하며, EDCF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이 아닌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차관을 지원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EDCF는 최근 5년간 최빈국 지원 비중이 연간 집행액의 44% 수준이라고 설명하였고, 검토단은 이를 높게 평가하면서 빈곤국에 대한 고양허성 차관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검토단은 개발재원 수요에 비해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EDCF가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검토단이 질의한 최빈국 지원 리스크와 관련하여 EDCF는 기본적으로 최빈국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고려하여 차관을

2) 2014년 12월, OECD DAC 회원국은 ODA 차관의 통계보고 방식을 현대화하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빈국에 대한 고양허성 차관 지원을 유인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됨 (OECD, 2016)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EDCF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도국 채무감당능력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결과를 토대로 채무상환 능력과 채무관리 능력이 충분한 국가에만 차관을 지원하고, 또 고양허성 차관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빈국 지원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3. 수원국 캄보디아 방문 결과

검토단은 한국 방문에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2017.6.26.~6.30)하였고, 한국대사관, EDCF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프놈펜 사무소, 캄보디아 정부 부처(개발위원회, 경제재무부, 교육부, 농촌개발부, 보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사무소 등을 방문해 ODA 관계자들과 면담하였다. 검토단은 캄보디아 정부 부처와 면담 시 수원국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한국 측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도록 하였다.

검토단은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노력이 수원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검토단은 캄보디아의 우선순위와 수요를 반영한 한국의 개발원조 활동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고양허성 차관 제공, 프로그램 미션을 통한 중기 예측성

제고, EDCF-KOICA 현지 사무소의 'One roof' 협력 체제, 대사관을 통한 조정 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파악하였다. 반면, 현장 인력 확충, 무상원조 창구 단일화, 사무소 권한 강화, 시민사회의 잠재력 활용 등은 다소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검토단은 한국이 개발원조 이외의 분야, 즉 제조업·관광업·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우호적인 이주 정책, 이주자 송금 등에서도 수원국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토단은 ODA의 촉매적 역할을 강조하며 공적수출금융, 민간투자 등 광범위한 개발재원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4. 혁신주제 발표: PPP를 통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

한국에 대한 DAC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12월 6일 파리 OECD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20여 개 DAC 회원국과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혁신주제 토의와 일반주제³⁾ 토의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나, 본 원고에서는 EDCF와 관련된 혁신주제 토의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혁신주제 토의는 2017년 DAC 동료검토 회의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인데, 피검토국이 동료 회원국과 공유 또는 토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

3) 일반주제로는 한국의 개발협력 특징을 반영한 두 가지 토의 주제인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과 '범정부 개발협력 조정 및 정책 정합성'을 선정함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EDCF는 한국 정부의 민간 파트너십 강화 정책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자금과 전문성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EDCF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래 <표>의 세 가지 지원 모델에 따라 PPP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각 지원 모델별로 실제 지원 사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달성을 위한 유상원조의 민간투자 촉진 역할을 집중 조명하였다.

<표> EDCF의 PPP 지원 모델

지원방식	지원내용
부대 인프라 지원	민간투자 유치 환경 조성 과 PPP 사업의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PPP 사업의 부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원국 재정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 부문 분할 지원	사업성이 있는 PPP 사업 설계를 위하여 PPP 사업 부문과 연계하여 수원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사업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
SPC 앞 투자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설립을 위하여 수원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금융 지원

출처: 저자 작성

또한 EDCF는 그간 PPP 사업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재원의 민간투자 유인 효과를 수원국 소득 그룹별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개발재원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반면, 최빈국이나 취약국에서는 개발재원이 민간재원 동원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개발효과 창출로 연결해 주는 촉매제 역할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EDCF의 PPP를 통한 민간부문과의 협업 사례는 미국, 일본, EU,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또한 EDCF의 PPP 사업 지원 사례에 대해 다수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OECD 개발재원 논의가 실제 원조시행기관의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II. 한국 ODA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

1. 한국의 개발협력 평가

OECD DAC은 2017년 동료검토에서 2012년 한국에 대한 최초의 동료검토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개발협력 정책과 시행현황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검토하고, 한국은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한국은 개발협력의 성공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대상국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개발재원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도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여 주었다. 즉,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SDG 달성을 위한 개발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유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연차총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발 및 포용적 성장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최저 수준의 차관 이자율을 특징으로 하는 고향허성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중기 차관 후보사업계획 선정과 중기 차관 재원 약정 방식 활용을 통해 수원국의 원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전체 자금흐름⁵⁾의 규모는 ODA의 6~8배에 달하는 바, 한국은 ODA와 비ODA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2012년 동료검토에서 제시된 24개의 권고사항 중 21개에 대해 이행조치를 취하였고, 신흥공여국과의 삼각 협력을 통한 전문성 공유 및 협력,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원조사업 개발,

4) 한국은 ODA 예산의 1.7%를 국내 ODA 인식증진에 활용하는 등 국민들의 개발협력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5) 민간투자, 비양허성 차관, 송금 등

협력대상국 우선순위에 따른 유·무상원조 지원, 자연재해 위험 경감 및 대응 등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2. 권고사항(12개)

OECD DAC은 이번 동료검토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노력을 위와 같이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기존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제시하였다. 즉,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 개발재원의 조달과 배분,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 원조 지원 수단과 파트너십, 성과 관리 및 평가, 인도적 지원 노력 등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① **(ODA 시스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전략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ODA 체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
- ② **(성과관리 및 평가)** 한국의 모든 ODA 시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 및 내부 교훈 공유, △사업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 ③ **(ODA 재원 및 비구속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고,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④ **(현지 파트너십)** 현지 사무소 및 재외공관의 활용을 포함, 한국은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 고유의 기여 방안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 정부와 기존 조정기제 활용,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대화 심화·확대

⑤ **(사업 운영)** 한국은 협력대상국의 개별 사업요청 도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자금 지원 종결 이후에도 협력대상국 정부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인도적 지원)**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

⑦ **(취약국 지원)** 한국은 취약성 맥락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조정과 더불어 취약성을 다루는 관련 정책그룹들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⑧ **(현장권한 확대)**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 하고,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더욱 분권화하여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 ⑨ **(효과성 제고 및 소통강화)** 효과성 제고 및 모든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한국은 △중점협력국에서 한국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모든 요청사항을 관리 및 조정하도록 하며, △체계 및 절차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너지 제고 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사업(활동)의 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⑩ **(역량강화)** 한국은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동 검토 결과는 한국의 시행기관들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 ⑪ **(정책일관성)** 한국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잘 조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전파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정책간의 우선순위 조정기제를 구축한다.
- ⑫ **(시민사회 협력)** 한국 정부는 이행 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IV. EDCF의 향후 과제

2017년 동료검토 결과, 위와 같이 제시된 12개 권고사항 중에서 EDCF에 직·간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대략 9개 사항이다. OECD DAC의 동료검토 보고서⁶⁾를 참고해 보면 이번 권고사항은 전략적 성과 관리 및 평가,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4개의 소제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소제목 하에서 각 권고사항별로 EDCF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략적 성과 관리 및 평가

가. (권고사항 2) 시행기관의 성과 관리 및 평가 강화

EDCF는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평가 품질 향상, 내부 평가역량 강화를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완공평가 후 2년 경과 사업 중에서 적합한 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 수준에 맞는 정보 공개 기준을 2014년 11월에 이미 수립하여 평가보고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EDCF는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원국 및 한국 내 공동 워크숍 개최, EDCF 이해관계자

6) OECD (2017).

교육, 다양한 학술 활동 전개 등을 통해 평가 과정 및 결과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을 널리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이 2015년에 가입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에 대한 정보 공개 항목도 더욱 확대하여 원조 정보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2.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가. (권고사항 3) ODA/GNI 목표 달성 계획 수립 및 비구속화·최빈국 지원 강화

EDCF는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정책에 따라 매년 EDCF 차관 승인 및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ODA 기본 계획에 따라 비구속성 차관 비중도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연간 승인액의 52%에 달하였고, 최빈국에 대한 차관지원 비중도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집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DCF는 정부의 2020년 비구속성 차관 비중 목표⁷⁾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 협조 용자, PPP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차관, 개도국 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차관 등 비구속성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차관의 비구속성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기

7) EDCF 연간 차관 승인액의 55% 이상을 비구속성으로 제공

재원 배분 계획 등을 수립·운영하여 최빈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 비중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 (권고사항 4) 수원국 현지 정책대화 심화

EDCF는 한국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 연계되는 수원국별 중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와 프로그램 미션, 정책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탄자니아 등과 같은 현지 사무소에서는 원조공여기관 협의체(예시: 베트남 6 Banks⁸⁾ 협의체)와 수원국 원조총괄기관 주재 협의체에도 활발히 참석하고 있다.

앞으로 EDCF는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미션 및 정책협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각 수원국의 보다 많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원국 현지 원조공여기관 간 정책대화를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사무소의 원조공여기관 협의체 활동이 타 국가의 현지 사무소로 확산 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공여기관 협력 전담 인력을 확충해 주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 하다.

8) ADB, World Bank, KfW(독일), AFD(프랑스), JICA(일본), EDCF(한국) 등 6개의 차관 공여기관

다. (권고사항 5) 포용적 사업계획 및 지속적 투자 유도

EDCF 차관 신청은 수원국의 외채를 늘리는 행위이므로 수원국 내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대부분 수원국의 공공투자 위원회나 원조총괄 부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나 유관 부처의 승인 또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관 신청이 이루어진다. EDCF는 프로그램 미션이나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과 차관사업의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있다. 한편, EDCF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이하 F/S) 실시, 사업 심사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이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보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또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DCF는 앞으로 개별 프로젝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발굴되도록 프로그램 미션이나 정부 간 정책협의를 시 보다 많은 수원국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을 만나 다양한 개발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 정부의 유지·관리 목적의 투자가 계속되도록 수원국 정부의 운영·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라. (권고사항 7) 타 공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국 지원 강화

EDCF는 2017년 5월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의 취약성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MDB와 협조용자를 추진하여 취약국 지원사업의 개발 효과를 더욱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EDCF는 앞으로 취약국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MDB와 협조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취약국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Network on Governance: GOVNET)⁹⁾ 등 국제원조사회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취약국 지원 경험이 풍부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해외 양자원조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3.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가. (권고사항 8) ODA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 권한 강화

EDCF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차관사업 승인 절차와 유사한 일련의 절차¹⁰⁾를 운영하면서도 승인 절차 촉진을 위해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EDCF는 수원국 현지 사무소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본부 지원, 연락 등의 제한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 전 단계에 적극 참여

9) GOVNET은 수원국의 효과적·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역량 강화, 부패 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OECD DAC 산하기구를 말함

10) EDCF 차관사업 승인 절차는 차관 신청 → 사업 심사 → 정부 지원방침 결정(차관 승인)

하도록 하고 있다.

EDCF는 앞으로 사업 승인 절차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개념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수립, 사업타당성조사(F/S) 실시 등의 사업 준비 절차를 더욱 신속히 추진하면서 수원국 내 차관 신청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밀착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편, 현장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사무소 조직 및 인원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 사무소가 사업 주요 단계에서 좀 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권고사항 9) 통합적 ODA 추진을 통한 개발 효과성 제고 및 의사소통 증진

EDCF는 수원국 원조총괄기관과의 현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재외 공관 주관의 ODA 현지협의체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유관 기관과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 내의 EDCF 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등은 물론 EDCF-KOICA 정례협의 등 유·무상 연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DCF는 앞으로 관계기관협의회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보다 많은 유관 부처 및 무상원조기관과 사업 발굴·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한, EDCF는 무상원조기관이 EDCF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N-2년제¹¹⁾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ODA 융합예산¹²⁾이나 ‘Fast-track’¹³⁾ 제도를 심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 (권고사항 10) 개발협력 관련 역량·기능 검토 및 인력 계획 수립

EDCF는 그동안 개발협력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수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지원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협력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 내외 교육, 유관 부서와의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금융, 지역, 개발이슈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EDCF는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정치한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EDCF 담당 인력에 대한 ODA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또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에 대한 한국 초청 연수 등을 도입하여 실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2년 전'에 미리 제안된 사업들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원국 개발수요를 반영하거나 EDCF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12) 정부부처·시행기관별로 편성하던 ODA 예산을 '수원국별로' 편성하여 정부부처·시행 기관이 서로 연계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18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도입하여 13개 부처 118개 사업 반영)

13) 2년 전에 미리 제안된 사업들만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사업 지원 절차(N-2년제)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수요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는 현재 도입 검토 중

4.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가. (권고사항 12)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 마련

EDCF는 유상원조 사업의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개별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험은 없으나, EDCF 자문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상원조 정책과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등 정부 기관이 개최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유상원조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EDCF는 앞으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타국 선진 원조기관의 시민사회단체 협력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사회 단체가 EDCF와 협업하거나 유상원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V. 시사점 및 결론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이번 동료검토에 나온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동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에서 정리한 동료검토 내용이나 과제들이 동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DCF 입장에서 보면, 2017년 동료검토도 2012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ODA/GN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규모 확대, 최빈국이나 취약국에 대한 집중 지원 등 차관의 양적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양적 확대 이외의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비구속성 지원 확대, 성과 관리 및 평가 강화, 현지 정책대화 심화, 현장 권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비구속성 지원 확대가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우선 양적 확대에 관한 권고를 보면, EDCF 차관사업은 대부분 수원국이 직접 발주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사업이다 보니 한국의 무상원조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단년도 무상원조 사업과는 달리, 단기간 내 예산집행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 사업 진행은 수원국의 내부 승인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고, 자금 집행은 수년에 걸쳐 공정률에 따라 조금씩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변수가 많은 편이다. 물론 EDCF는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자금 집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EDCF가 차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차관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차관 승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가용한 개발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신용기관, 개발금융기관, 타 원조공여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협조용자 규모를 더욱 늘리고, 민관협력(PPP)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재원 동원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편, EDCF는 차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무상원조기관의 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사업 준비 단계의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진행 중 교육·훈련 지원, 완공 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을 위해서는 무상원조 방식의 기술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융합예산 편성이나 N-2년제 보완을 위한 ‘Fast track’ 제도 등은 무상원조기관의 EDCF 사업에 대한 연계 지원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하나인 비구속성 차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용자, 민자사업차관, 프로그램차관 등의 비구속성 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 선진 원조공여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한국의 차관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또 수원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현지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 일반 차관도 비구속성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DCF 관계자들은 일반 차관까지 비구속성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기업들은 EDCF 사업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사업 수주 경험을 쌓으면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라도 비구속성 원조사업을 당당히 수주할 수 있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와 EDCF는 우리나라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EDCF 사업에 타 경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구속성 차관 비중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구속성 지원을 허용하는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보도 자료 “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ODA - 우리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배포일: 2018.2.6.)

대한민국정부 (2018).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국문번역본

한국국제협력단 (2018). “EDCF가 바라본 2017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국제개발협력』 2018 No.1.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OECD DAC 동료검토의 이해.” 『EDCF Issue Paper』 vol.6(3).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문헌

OECD (2016). “Taking stock of ai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Taking-stock-of-aid-to-least-developed-countries.pdf> (접속일: 2018.2.14.)

OECD (2017). “Review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of Korea.” DCD/DAC/AR(2017)2/26/PART1/FINAL.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DCF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목 차

- I. 일반개황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3. 대외거래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3. 국제관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V. 종합의견

I . 일반개황

면적	33.1만 km ²	GDP	2,152억 달러 (2017년)
인구	95.5백만 명 (2017년)	1인당 GDP	2,253달러 (2017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 (VND)
대외정책	미국·중국과 전략적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22,705.50 (2017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편, 미국과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관계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 및 외국인투자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여 2012~13년 중 소비 및 투자 위축, 국영기업과 은행부문의 부실 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그쳤음. 2014~15년에 성장률은 전자 및 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6%대로 회복됨.

○ 2016년에는 평균 12.4%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함에 따라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광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함께 건조한 내수 등에 힘입어 6.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89('13년)→92('14년)→118('15년)→126('16년)→129('17년⁹⁾)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대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소폭 둔화 전망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 가격, 동화(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2~14년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며 2014년 4%대로 낮아짐.

○ 2015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가 0.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의료보조금 축소, 학교수업료 인상 및 연말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함.

○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2017년 말 전기요금 인상 효과 지속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정부부채 이자지급* 등 재정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6%로 소폭 확대됨.

* 2016년 정부부채 이자지급 규모가 재정수입의 7.9%에 달함.

- 2017년 인프라 부문 지출 등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입 증가와 조세 징수 개선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추정됨. 2018년에는 간접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 복지비용 증가, 정부부채 이자 지급 등으로 전년 수준의 -5.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6.0	6.7	6.2	6.3	6.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7	4.4	4.0
재정수지/GDP	-6.3	-6.2	-6.6	-5.8	-5.8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79위*로, 항공(103위), 도로(92위), 전기공급(90위), 항만(82위) 부문이 취약함.

-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질이 열악한 편으로 운송비 부담이 높음.

-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차량 소유는 확대되나 교통 인프라 개발이 지체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함.

* cf) 인도네시아(52위), 인도(66위), 필리핀(97위)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처리 비효율 존재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에서 베트남은 33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6개국 중 인도(79위), 중국(79위), 인도네시아(90위), 필리핀(101위)보다 낮은 113위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반부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직자의 경우 최초 임명 또는 선출 시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재선임, 2억 동(8,807 달러 상당) 이상 재산증가 시에도 변동내용을 공개하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전년 82위에서 금년 68위로 상승하는 등 중상위권으로 평가됨.

- 부문별로는 건축인허가(20위), 자금조달(29위), 재산권등록(63위), 전기공급(64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사업청산(129위), 창업(123위), 수출입절차(94위) 관련 행정처리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

□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 부실화 이후 대규모 NPL,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은행부문은 구조적으로 취약함.

- 2018년 1월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하면 NPL* 및 NPL 전환위험 대출 비율은 2016년 말 10.1%에서 2017년 11월 말 7.9%로 하락함. 2017년 8월 시행된 Resolution 42**가 비율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은행권 부실채권(NPL)비율은 2012년 3분기 4.93%에서 2016년 말 2.46%로 하락한 이후, 2017년 2분기 2.48% 수준이나, Fitch에 의하면 NPL 규모는 과소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8월 시행된 국회 ‘Resolution 42’에 의거하여, 해당 채무자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담보자산을 장부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 있게 됨.

- 베트남의 GDP 대비 여신비율은 2016년 말 기준 140.1%로 베트남이 속해 있는 하위중소득국 평균(66.8%) 및 인도(75.4%), 필리핀(63.5%), 인도네시아(47.9%)에 비해 높은 편임.

- 2017년 8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비율(CAR)은 12.37%이며 국영은행의 자본적정성비율은 9.69%로 민영은행(11.12%) 및 외국계은행(32.17%)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주요 국영은행(산업무역은행(Vietinbank),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투자개발은행(BIDV)) 및 주요 민영은행(ACB, Techcombank, Sacombank, MB)

나. 성장 잠재력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 FDI 유입은 2014~2016년 중 평균 112억 달러 수준이며 2017년에도 12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대비 FDI 순수입은 127개 국가 중 26위로 높은 수준임.

-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하락추세이나 2017년에도 1~11월 누계 기준 58.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기록함.

-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휴대폰, 섬유·의복, 컴퓨터·전자제품 및 신발 부문 수출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1.0%에서 2017년 57.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증가를 주도함.
- 2014년~2030년까지 발전 등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해 1,306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됨.

〈표 2〉 2017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투자 분야	지역	투자금액 (억달러)
Nghi Son 2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Thanh Hoa	27.9
Van Phong 1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Khanh Hoa	25.8
Samsung 디스플레이 베트남		Bac Ninh	25.0
Nam Dinh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Nam Dinh	20.7
B-오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석유·가스	Kien Giang	12.7

자료: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으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세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

- 2016년 말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로 인도네시아(67%), 인도(65%), 필리핀(63%)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말 5,577만 명에서 2017년 말 약 5,636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베트남은 낮은 노동생산성, 관리자급 전문인력과 숙련노동력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음.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117개 국가 중 26위로 평가되어 향후 노동력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구매력이 큰 인구비중이 높고 대도시 인구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9,5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의 인구대국으로, 2022년에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구매력이 큰 25~54세 인구가 약 4,381만 명에 달해 인구의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도시에 구매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2006년 9.1백만 명에서 2016년 13.6백만 명으로 증가함. 대도시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장기평균 경제성장률과 장기평균 1인당 GDP증가율이 각각 6.4%와 5.3%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수준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소 미흡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공공부채 규모는 2016년 GDP 대비 60.7%로 아시아 신흥개도국 평균(47.0%)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7년에는 61.5%로 추정되는 등 정부 자체 설정 상한선인 65%에 근접하고 있음.
- 한편,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전망으로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GDP의 65%),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단계적 축소, 국영기업 일반지출 감축 등으로 공공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무역 자유화와 함께 국영기업 주식매각 등 부분 민영화 지속 추진

○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 이후 베트남 정부는 국영 기업 개혁과 재정보강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9월 공기업 포함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가 원칙적으로 철폐되고, 국채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됨.

- 베트남 정부는 2017년 1월 최대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인 국영 전력회사 페트로베트남파워 (Petrovietnam Power)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2018년 1월 말 3.1억 달러 규모의 공개 매각을 실시함.

- 또한 2017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최대 국영 양조회사인 Sabeco 지분 54%를 태국 기업 Thai Beverage에 48억 달러에 매각함.

□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추진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3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국회에 제출, 동년 4월 비준을 받아 확정함.

- 동계획은 ①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시민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 ④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국가안전 보장, ⑥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 등을 주내용으로 함.

- 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도시화비율 38~40%,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의료보험가입 인구비율 80% 등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환율정책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10%(’12.1월) → 7%(’13.5월) → 6.5%(’14.3월) → 6.25%(’17.7월~18. 2월 현재)

- SBV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절하하였으며, 2015년에도 세 차례(1월, 5월, 8월)에 걸쳐 총 3% 절하를 단행하였고 2016년 1월에도 달러당 2만 1,896동으로 0.03% 절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5년 8월에는 일일 환율밴드를 $\pm 1\%$ 에서 $\pm 3\%$ 로 확대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대로 하락
 - 2015년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소득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0.1%로 급감함.
 - 2016년에는 휴대전화 등 수출 확대와 자본재 등 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82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4.1%로 상승함.
 - 수입증가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따라 2017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증가율도 확대
 - 총수출은 GDP 대비 2013년 83.9%에서 2017년 97.8%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증가율도 2015년 7.6%에서 2016년 9.1%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도 11.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증가율(%): 14.8('13년) → 12.9('14년) → 7.6('15년) → 9.1('16년) → 11.1('17년e)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역경제 통합에 따른 베트남의 수혜 전망 등으로 2017년에도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외환보유액은 4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3~2.4개월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 말 38.4%에서 2017년 말 42.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상승세이나 DSR은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4년 38.0%에서 2016년 46.9%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48.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외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6년 3.4%에서 2017년 4.0%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9,074	-119	8,235	2,794	3,391
경상수지/GDP	4.9	-0.1	4.1	1.3	1.4
상 품 수 지	12,126	7,396	14,013	4,033	3,542
수 출	150,217	162,112	176,632	196,886	210,521
수 입	138,091	154,716	162,619	192,853	206,979
외 환 보 유 액	34,189	28,250	36,527	39,972	40,209
총 외 채 잔 액	70,600	80,400	94,500	105,400	117,400
총외채잔액/GDP	38.0	42.0	46.9	48.9	50.5
D S R	3.4	3.9	3.4	4.0	4.1

자료: IMF, EIU,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전망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 내정후 5월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함.

-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응우옌 푸 쩡이 유임되었으며, 국가

주석은 개혁파인 쩌ن 다이 쩡이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푹이 선출됨.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6월 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짐.
 - 만연한 부패가 공산당(CPV)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2017년 9월 PetroVietnam 전 회장 사형선고 등 뇌물사건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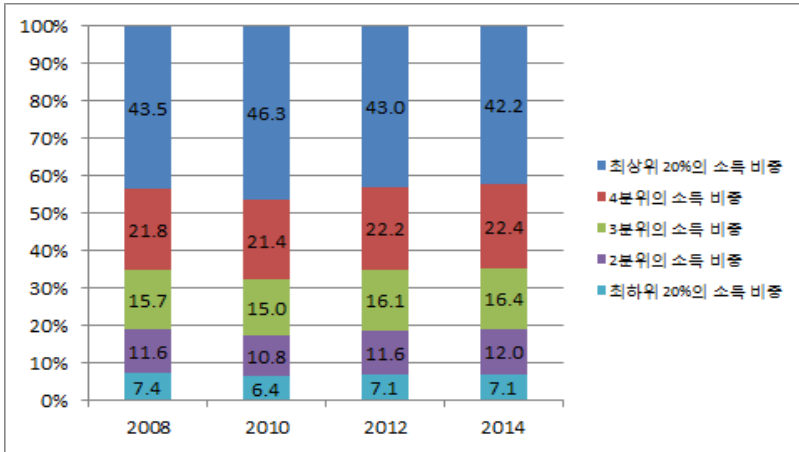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후 다소 완화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2010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이후 다소 완화됨.

* 소득 최상위 2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최하위 20% 비중 대비 2006년 6.0배에서 2010년 7.2배로 확대된 이후, 2014년 5.9배로 완화됨. 지니지수(GINI Index)는 2008년 35.6에서 2010년 39.3으로 상승한 이후, 2014년 34.8로 하락하며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됨.

* 한편,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3.5%로, 도시 지역은 3.8%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18.6%로 높은 수준임.

〈그림 1〉 국민소득 대비 소득 5분위별 비중

단위: %



자료: 세계은행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민들이 베트남 정부에 대해 기본권 등의 국제기준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토지분쟁 등 사회적 긴장이 표면화될 수 있음.

3. 국제관계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중 관계 악화 가능성 잠재

-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으며 특히,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 분쟁지역: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 중국이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 더욱이, 2015년 5월 중국 해군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정서가 더욱 확대됨.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2016년 8월 남중국해 Spratly 군도 내 5개 기지에 이동식로켓발사대를 배치함.

□ 미국, 일본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전방위적 외교정책 추진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으로, 남중국해 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일본 군함의 캄라인(Cam Ranh)만 기항을 허용하고, 일본·인도·호주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문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과는 1995년 관계 정상화 이후 2001년 12월 무역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함.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군사정책’ 및 ‘군사협력’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7월 정상회담 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베트남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방위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으로 양국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2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은 베트남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2016년 5월 미국의 대 베트남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베트남은 113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엔진 등 21억 달러 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함.

□ ASEAN, CPTPP, RCEP 참여 등 경제통합에 적극적 자세 견지

-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AEC)에 참여한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년 12월 체결된 EU와의 FTA는 2018년 발효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TPP 탈퇴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적극 참여 등으로 경제 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참여

** 중국, 일본, 한국, ASEAN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참여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중장기 차관이 총외채의 약 81.3% 수준으로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이 4.0%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17년 9월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8.7억 달러, 중장기 110.9억 달러 등 총 129.6억 달러이며, 이중 미회수채권은 중장기 80만 달러(0.01%)에 불과하여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평가기관은 베트남에 대한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베트남에 대하여 2009년 5등급을 부여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S&P는 베트남에 대한 등급을 2010년 12월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 이후 유지하고 있음. 한편, Moody's는 동 등급을 2014년 7월 B2에서 B1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Fitch도 2014년 11월 B+에서 BB-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8. 2.)	C1 (2017. 2.)
OECD	5등급 (2017. 6.)	5등급 (2016. 6.)
Moody's	B1 (2017. 4.)	B1 (2014. 7.)
Fitch	BB- (2017. 5.)	BB- (2016.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2년 12월 22일(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 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문화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기술협력협정(2005년), 항공협정개정(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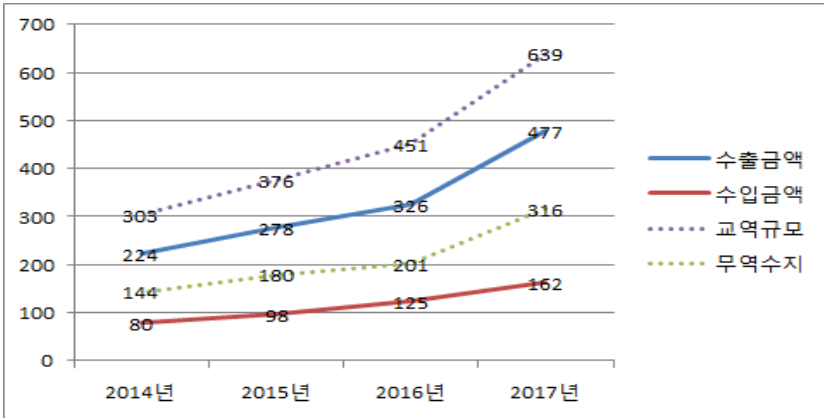
-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 흑자 증가 추세
 - 대 베트남 교역규모는 2016년 45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39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4위 교역상대국임.
 - 한국·베트남 FTA가 2015년 12월 발효되었는 바, 양국간 교역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정부는 2020년 한-베트남 교역규모를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01억 달러에서 2017년 316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기준 베트남은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발 등임.

〈그림 2〉

한·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9월말 기준 5,231건, 166.7억 달러 (누계기준)

○ 베트남은 투자금액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4대 투자대상국이며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21.4억 달러), 의복(12.7억 달러), 섬유제품(9.9억 달러) 등 제조업(102.6억 달러)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V. 종합의견

□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6년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함.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2017년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3%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함께 건조한 내수 등에 힘입어 6.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둔화된 이후 2016년에 2.7%로 회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4.4%로 추정됨. 인프라와 복지비용 등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6.0%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공공부채는 GDP 대비 60.7% 수준으로 아시아 신흥개도국 평균(47.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2016년 4.1%에서 2017년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 일본 및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7년 48.9% 수준으로 추정되나 총외채의 약 81%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4.0%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총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로 증가세인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7년 말 400억 달러 수준이며 단기외채 대비로는 2.3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목 차

- I. 일반개황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3. 대외거래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3. 국제관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V. 종합의견

I . 일반개황

면 적	156만 km ²	G D P	112억 달러 (2016년)
인 구	300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3,704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이원집정부제	통 화 단 위	Tugrik (투그릭)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 율 (달러당)	2,011 (2016년 평균)

-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2000년대 초 광업 부문의 호조에 따른 고속 성장을 달성함. 이후 광업 부문 침체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반등, IMF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
-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7.9	2.4	1.0	2.0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2.9	5.9	0.6	4.4	6.0
재정수지/GDP	-11.3	-8.5	-17.0	-8.7	-7.4

자료: IMF

□ 광물 수출 호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으로 2% 대 경제성장

- 광물가격 상승세 및 투자 증대 등 광업 부문 급성장으로 2011~13년 연평균 성장률이 13.5%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감 등 악재로 2016년 1%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 20.6('13) → 3.4('14) → 0.94('15)
→ -40.7('16)

- 2017년 경제성장률은 5월 중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요구에 따른 긴축 재정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석탄, 구리 등 광물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4%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리오 틴토사(Rio Tinto)*와 몽골 정부 간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 2단계 프로젝트 개발 착수로 인해 2018년에도 2.5%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 철광석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인 호주의 다국적 광산개발업체

** 구리(3,700만톤), 금(1,275톤) 등이 매장된 세계 최대의 구리·금 광산이자 몽골의 전략광산으로 동 광산의 2단계 개발 프로젝트는 2019~20년경 개발 완료 및 상업적 생산 개시가 예정됨.

□ 원자재 가격 회복, 광업 부문 투자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 2013~15년 중 외화 부족 및 투그릭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반면 2016년 중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로 급락함.

- 투그릭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몽골 광산 경기 침체 및 외국인 투자 이탈과 함께,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등으로 급격한 상승(투그릭화 가치 하락) 추세를 보였음.

* 환율추이(투그릭/달러): 1,524('13) → 1,818('14) → 1,970('15) → 2,140('16) → 2,440('17)

○ 2017년에는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견조한 광업 부문 투자 유입 기대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6%대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112.2('14) → 59.45('15) → 37.9('16) → 56.8('17)

** 구리가격(런던금속거래소 기준, 달러/톤): 6,359('14) → 4,702('15) → 5,501('16) → 7,157('17)

□ 구제금융 합의에 따른 긴축정책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축소

○ 몽골정부는 2010년 재정 안정법(Fiscal Stability Law) 제정을 통해 2013년부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원 개발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3~15년 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10%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함.

* 재정수지/경상GDP(%) : -8.9('13) → -11.3('14) → -8.5('15) → -17.1('16)

○ 2017년 상반기 중 GDP의 절반에 상당하는 구제금융(약 55억 달러*)을 지원받기로 합의하고 개인소득세제 개편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전년(-17.1%) 대비 감소한 -8.7%를 기록함.

- 몽골 정부는 IMF의 예산 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 요구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술담배 특별세 인상(2018년 10%, 2019년 5%, 2020년 5%) 및 개인소득세 인상(소득구간별로 10~25%까지 인상) 등의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음.

* IMF 4.3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일본 약 30억달러, 중국과 통화스왑 계약연장 약 20억달러(150억위안 상당)

- 다만, 2017~19년 3년간의 IMF 구제금융 자금 유입 등 감안시 재정적자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95%) 등 감안 시 2018년에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GDP의 -7.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3C(Coal, Copper, China)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

- 몽골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탄, 구리 등 광업 부문이 몽골 GDP의 19.9% 및 총수출의 7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동차, 기계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표 2〉 몽골의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광업	20.2	17.6	16.7	19.9
농·목축업	14.5	14.0	13.7	12.0
도소매업	17.4	16.4	11.9	11.3
제조업	8.3	10.6	8.4	6.7

자료: 몽골통계청

〈표 3〉

몽골의 총수출 및 광물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수출	42.7	57.7	46.7	49.2
광물	34.9 (82%)	47.9 (83%)	36.8 (70%)	34.8 (71%)

주: () 안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광물 수출 비중

자료: 몽골통계청

-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로, 생산된 광물의 대부분이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80%로 교역국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광물수요 및 투자 감소가 최근 몽골 경제 성장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대중국 수출 비중(%): 83.7('13) → 88.5('14) → 84.0('15) → 80.0('16)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에 따른 투자 및 수출 증대 가능성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구리(매장량 5,500만톤, 세계2위), 형석(1,200만 톤, 세계3위), 석탄(1,750억톤, 세계4위), 우라늄(6,300만톤, 세계14위) 등 80여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광물가격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늘고 광물 수출로 인해 상품수지가 개선됨.

○ 정부는 2006년 15개의 전략광산*을 지정해 정부가 동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광산개발 추진 및 생산된 광물 자원의 수송을 위해 2021년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과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및 전략광산을 연결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임.

*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지역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

몽골의 15대 전략광산 위치



출처: 몽골 대사관

- 특히 오유 톨고이(Oyu Tolgoi)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으로 2단계 프로젝트의 개발 완료 및 생산 개시 시점인 2020년에는 동 광산의 금·구리 수출이 몽골 GDP의 55%, 재정수입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다. 정책성과

□ 철도 등 수송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진함

○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열악한 물류여건이 광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철도가 1940~50년대에 부설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수도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 지역은 수송 인프라가 더욱 열악함.

○ 이에 정부는 2010년 총 5,600km에 달하는 1~3단계 철도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정난과 정치적 갈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음.

* 1단계 : 서남부-동북부 간 연결 철도 (1,100km)

2단계 : 남고비-중국 국경 간 연결 철도 (900km)

3단계 : 서북부-중국·러시아 국경 간 연결 철도 (3,600km)

□ 국제기구 차관 도입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 및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

○ 2013년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외환위기 및 환율 급등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2017년 중 IMF의 구제금융 도입 합의,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 등 유동성 확보에 성공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일부 완화됨.

□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정책 추진

- 몽골 국회는 2008년 ‘국가개발전략(‘07~’21)을 최종 승인하여 6대 우선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어, 2015년에는 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 탈피,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표로 ‘국가산업정책’을 제정함.

* ① 전략 광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 추진, ② 수출주도형의 지식기반 경제 수립, ③ 인프라 및 국토개발을 통한 도·농간 격차 축소, ④ 전반적인 몽골 국민의 개발, 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조성, ⑥ 정치적 민주주의 강화

- 이를 위해 1단계(‘15~’20년)로 원자재 국내 가공,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2단계(‘21~’25년)로 수출지향 산업을 강화하여, 3단계(‘26~’30년)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주력할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주)}	-1,405	-469	-700	-532	-1,237
경상수지/GDP	-11.5	-4.0	-6.3	-4.8	-9.6
상 품 수 지	178	563	1,338	1,618	1,299
수 출	5,471	4,447	4,804	5,774	5,953
수 입	5,293	3,884	3,466	4,156	4,654
외 환 보 유 액 ^{주)}	1,540	1,247	1,240	1,514	1,776
총 외 채 잔 액	20,941	21,603	24,756	24,803	25,165
총외채잔액/GDP	171.7	184.4	222.8	224.9	209.3
D S R	18.6	24.1	29.2	34.9	41.2

주: 2014~2017년 수치 출처는 IMF 또는 OECD, 2018년 출처는 EIU.
 자료: IMF, EIU, OECD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하락

○ 몽골은 오유 톨고이 광산 1단계 사업 완료('13)에 따른 광물 수출 확대로 2014년 상품수지 흑자전환 하였음. 이후 2017년 중 석탄 및 구리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20% 가량 증가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6.3%) 대비 감소한 -4.8%를 기록함.

- 2018년에도 오유 톨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 본격화로 인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 수입 증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서비스 및 소득 수지 적자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고 부족 및 대외지급능력 매우 취약
 - 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222.8%,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29.2%를 기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함.
 - 한편, 외환보유액은 2017년 중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오유 톨고이 광산 2단계 개발에 대한 투자 유입 효과로 전년대비 22% 정도 증가한 15억달러(GDP의 1%, 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 해당 규모)를 기록하였음.
 - 다만, 대외 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 중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224.9%,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4.9%로 추정됨.
- 구제금융 및 국채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

-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 9월 중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지원 조건,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음.

* 5차례 IMF 구제금융(백만 달러) : 33('91), 59('93), 49('97), 41('01), 223('09)

- 몽골은 수년간의 쌍둥이 적자 심화 및 해외직접투자(FDI) 이탈 현상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2017년 5월 IMF의 몽골에 대한 구제금융 승인,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 합의 등으로 약 55억 달러의 대외유동성을 확보함.

- 2017년 10월에는 미화 8억 달러 상당의 국채 신규 발행(이자 5.6%, 만기 5.5년)으로 2018년 1월중 만기 도래 예정이던 미화 6.6억 달러 상당의 국가 채권 리파이낸싱에도 성공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6년 의회내각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파 간 갈등 등의 정치 불안 요소 존재
-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2012년 총선에서 인민당(MPP)에 승리 하며 제1당을 차지한데 이어 2013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엘벡도르지(Elbegdorj) 대통령이 50.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 민주당은 76석 중 34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여 26석을 차지한 인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정국을 운영해옴.

- 그러나, 민주당 집권기(2012~16년) 동안 외국인 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정당 내 계파 간 갈등 등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도가 지속 하락한 결과, 2016년 6월 총선에서 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의 압승으로 의회 집권 정당이 교체됨.

- 2016년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수(총 76석) 중 인민당 65석을 차지한 데 비해 민주당은 9석에 불과

- 인민당이 2020년까지 의회 내 절대적인 의석(2/3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은 이전보다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2017년 9월 인민당 총리 등 내각의 총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인민당 내 계파 갈등 심화 등의 정치 불안 요소 존재함.

□ 정치적인 부정부패 문제로 기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높은 수준

- 몽골은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비리 등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관련한 법적 통제장치가 미약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임.

- 2015년 10월 국회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면대상 범위 확대 및 범죄자의 복역기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은 87/176위, 38/100점으로 낮은 수준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08년 이후 반정부 시위 발생빈도 감소 등 사회안정도 양호한 수준

- 2008년 총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을 겪었으나, 민주화 진전에 따라 이후 실시된 선거는 모두 별다른 소요사태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보임.

* 2008년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

□ 불균형 성장에 따른 빈곤 및 실업문제 심화

-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도시 및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지역 간 빈부 격차가 심각함.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됨.

- 2016년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몽골은 188개국 중 92위로, 201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통계 기준 몽골인구의 21.6%가 국가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 아래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기준 지니계수는 0.34로 다소 소득불평등도가 높음

-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구하고 전문 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수급 균형으로 인해 총 실업률은 10.4%, 청년실업률은 14.7%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

3. 국제관계

□ 중국, 러시아에 대해 중립노선 유지하면서 다자간 외교 추진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양대 교역투자대상국으로 대몽골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몽골은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러시아-몽골 3국은 최근 3차례('14.9월, '15.7월, '16.6월)에 걸쳐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을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에 합의하고, 삼자간 공동 계획 연구소를 울란바토르 내 설립 및 물류터미널 공사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망 확충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개발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것으로, 중국 주도로 인프라 연계는 물론 통상·산업·지역개발을 아우르는 중국의 대외경제 그랜드 플랜이자 국제무역질서 재편 전략

○ 한편, 몽골은 ‘제3의 이웃정책’을 바탕으로 과도한 중국·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제3의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4월 인도와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년 6월에는 일본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발효*함.

* 몽골과 일본은 각 5,700개,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

- 2016년 7월 이후 한국과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세 및 투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연구가 진행 중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만기구조는 양호하나 OECD 회원국 ECA의 금융지원액을 일부 연체 중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의 승인금액은 총 15.8억 달러(단기 0.2억 달러, 중장기 15.6억 달러)로 단기외채비중은

1.3%로 만기구조가 양호하나, 중장기 승인금액 중 7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신용등급 'B-' 수준 유지

-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재정건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악화를 이유로 2016년 중 몽골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였으나, IMF 구제금융 지원을 포함한 대외유동성 확보 등을 근거로 종전의 평가등급을 유지함.
- 한편, Moody's는 2018년 1월초 몽골 정부의 정부 부채 리파이낸싱 성공,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다른 국제신용평가 2사와 동일한 'B-' 수준으로 평가 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함.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2 (2017. 2.)	D2 (2016. 2.)
OECD	6등급 (2017. 6.)	6등급 (2016. 6.)
Moody's	B3 (2018. 1.)	Caa1 (2017. 3.)
Fitch	B- (2017. 11.)	B- (2016.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0년 3월 26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5일)
- 주요 협정 : 무역협정('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1년), 문화협력협정('91년), 투자보장협정('91년), 이중과세방지협약('93년) 세관분야 협력협정('93년), 사회보장협정('06년), 수형자이송협정('07년), 사증 발급간소화협정('12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 9월말 누적 기준 투자금액 449백만 달러 (579건)
- 교역규모 : 2017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억 42백만 달러를 기록함.
 - 몽골 교역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 수출 4.6%, 수입 0.18%

〈표 6〉 한·몽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347	246	209	228	자동차, 기호식품, 석유제품
수 입	24	46	10	14	동제품, 기타금속·비금속광물
교역규모	371	292	219	242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2011년 1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몽골은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2016년 1.0%를 기록함. 반면 최근 석탄, 구리 등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회복,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 인프라 투자 및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수년간의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였음. 다행히 2017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 IMF의 구제금융 지원 승인 등 외화유동성 확보에 성공하며 GDP 대비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각 -4.8%, -8.7%로 감소함.

- 기존 집권당인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2/3 이상의 의석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민당 내 계파 간 갈등 심화 등으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음.

- 장기간 쌍둥이 적자로 대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중 GDP 대비 총외채 비중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 224.9%, 34.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로부터 대외차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기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ks,lee@koreaexim.go.kr / sodamyun@koreaexim.go.kr

Tel : 02-3779-6583

- 기고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